

#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3년 겨울호  
Vol. 37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동향

2023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재정통계 동향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센터 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MOU 체결

# CONTENTS

## 2023년 겨울호

Vol. 37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재정통계

#### 국가회계 동향

- 04 2023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 13 제2차 국가결산 시범작성 영역 수행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18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19 2023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1 2023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22 2023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재정통계 동향

- 24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32 IMF의 Climate Change Indicator Dashboard 소개

## VOL. 37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3년 겨울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양은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팀장(회계연구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 38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 4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개발
- 44 2023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 46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

## **세미나**

- 50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 70 202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77 2023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센터 동향**

- 4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MOU 체결

## **오피니언**

- 90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 **공지사항**

- 95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 국가회계 동향



- 2023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 제2차 국가결산 시범작성 용역 수행

# 01 2023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2023년 IPSASB 정례회의(2023. 12. 5.), 캐나다 토론토

## 가. 출장 개요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참석

**출장기간:** 2023. 12. 4.(월)~2023. 12. 10.(일)

**출 장 지:** 캐나다 토론토

## 나. 주요 내용

2023년 4분기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sup>1)</sup>) 정례회의가 12월 초 4일간에 걸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IPSASB는 12월 회의에서 IPSAS 개선 과제 중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천연자원(nat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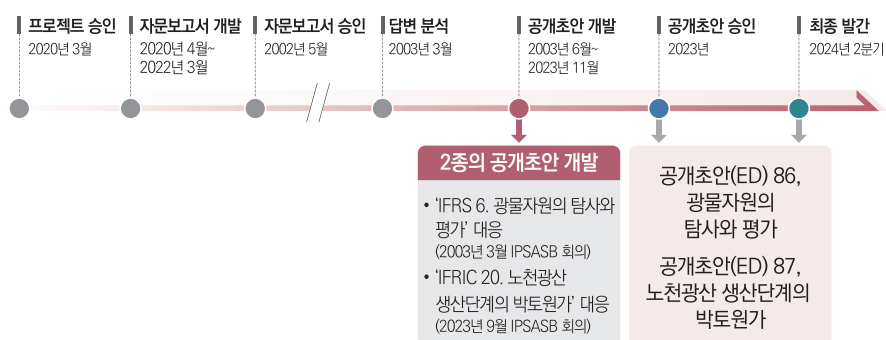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resources), '측정(measurement)', '리스(lease)'와 관련된 최신 쟁점을 다루었다. 또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와 관련하여 공개초안 항목 중 목적, 적용 범위, 개념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 다. 세부 내용

### 1)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그림 1 천연자원 프로젝트 진행 과정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프로젝트는 2020년 3월 승인되었으며, 천연자원에 대한 인식과 측정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IPSASB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개발한 자문보고서(CP)<sup>2)</sup>를 승인하여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후 2023년 3월에 수집한 답변을 분석하여 2023년 6월부터 공개초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개발 중인 공개초안은 2종으로, 각각 IFRS 6 과 IFRIC 20에 대응되는 것이며, ED 8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와 ED 87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Stripping Costs in the Production Phase of a Surface Mine)'로 최종 승인 되었다. 해당 공개초안은 천연자원에 관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향후 ED 88 '천연자원'과 함께 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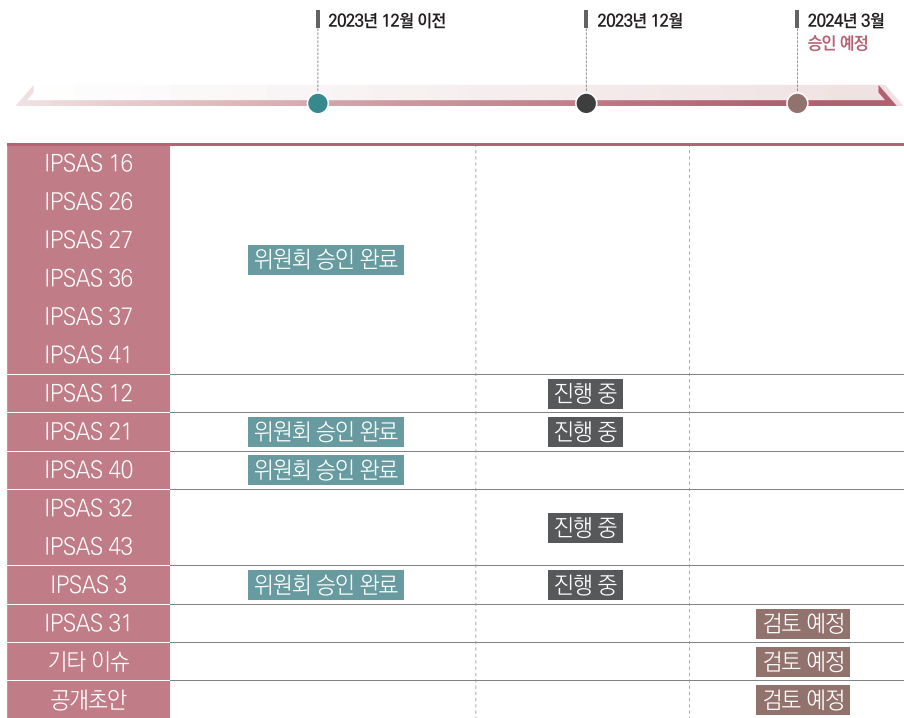
2) 자문보고서(CP): Consultation Paper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천연자원의 인식 기준에 대한 개정
- 보존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회계처리
- 교환거래 및 비교환거래로 획득한 천연자원의 측정
- 천연자원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을 별도의 IPSAS 기준서로 마련할지, 기존의 기준서(예: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농림어업)에 포함시킬지 유무

## 2) 측정-적용단계(Measurement-Application Phase)

**그림 2** 측정-적용단계 프로젝트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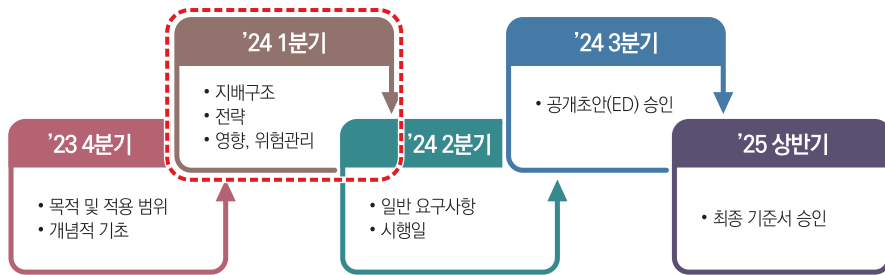
‘측정-적용단계’ 프로젝트는 ‘측정’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IPSAS의 현행 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2023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현행 운영가치의 적용가능성이 IPSAS 40 ‘공공부문 결합’에 포함되는 대신 개별 IPSAS 기준서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는 회계추정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IPSAS 46 ‘측정’에 도입된 ‘측정기법’이라는 용어는 IPSAS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40을 IPSAS 45 ‘유형자산’에 맞춰 개정하는 작업,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개정 등이 있었다.

### 3)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Climate Related Disclosures)

**그림 3**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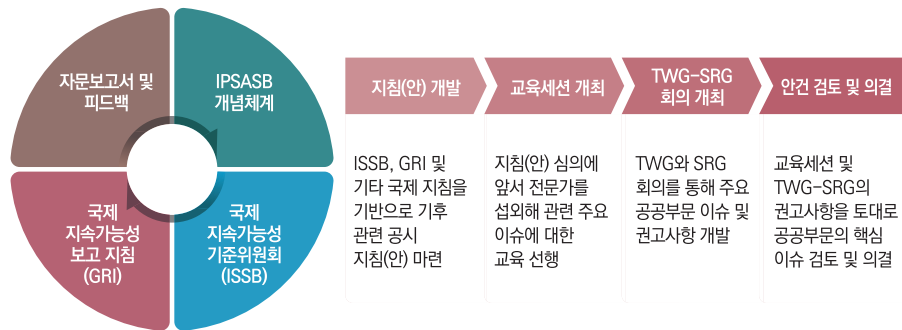


주: IPSASB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까지 이 프로젝트에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기본 개념을 통합할 계획이다. 개념적 기초에는 영향과 중요성이 포함되며 일반 요구사항에는 지침 출처, 보고 시기 및 위치, 판단, 측정 및 오류가 포함된다.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실체가 적용할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2023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를 승인하였다. IPSASB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타 기준 제정기구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 조직으로서 Climate-related Topic Working Group(TWG), 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SRG) 등의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내용을 기존 IPSAS 기준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침으로 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림 4**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의 개발 과정



2023년 9월 회의에서는 IPSASB 기후 관련 공시기준서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IFRS S2 및 GRI의 기후 관련 기준을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IPSASB의 교육세션을 통해 지속가능성 전문 지식을 활용하며 IPSASB 지속가능성 실무 조직을 통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였다.

9월 회의 이후, 개발 계획에 따라 SRG 회의와 교육세션을 개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SRG 회의와 교육세션 결과

| SRG 회의   | 교육세션(10월 26일 개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및 민간 부문 보고 전반에 걸쳐 표준화 및 높은 일관성 지원</li> <li>• 공공부문 지침은 특히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li> <li>• IPSASB에 대한 도전과제를 인식하지만 완전한 답은 없고 계속 진화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작성 담당자는 일관성 및 기준 제정자와의 협업 필요</li> <li>• 중요성은 이해관계자/사용자에 의해 결정됨</li> <li>• 재무정보는 투자자와 비투자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함</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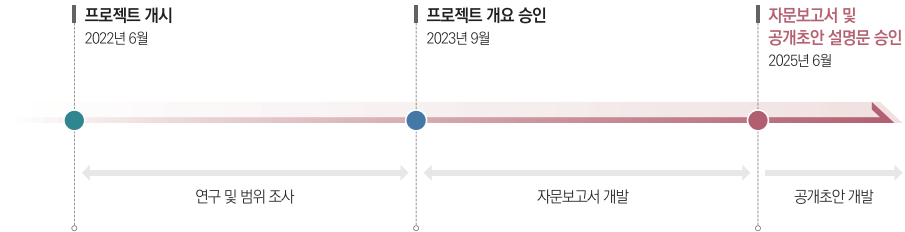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는 공개초안 항목 중 목적, 적용 범위, 개념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특히 기후 관련 보고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 검토

| 메모   | 공개초안 검토   | 출처              |
|--|---|-----------------|
|  | <p><b>[목적]</b></p> <p>1. 이 기준서[초안]의 목적은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 실체가 의사결정 및 책임 목적을 위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정보를 공시하는 원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회계실체의 서비스 제공 및 재정적 협약(financial commitment)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p>  | IFRS S2 및 GRI   |
|  | <p>2. 이 기준[초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변화협약(climate commitments)을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p>  | SDG 13          |
|  | <p><b>[적용 범위]</b></p> <p>3. 본 기준서[초안]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를 작성하는 실체는 다음 사항을 보고할 때 이 기준서[초안]를 적용해야 합니다.<br/>                     (a) 경제, 환경 또는 사람에 미치는 기후에 관련된 영향<br/>                     (b)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험<br/>                     (c) 이용할 수 있는 기후에 관련된 기회</p> | IFRS S2.3 및 GRI |
|  | <p>4. 실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p>  | IFRS S2.4       |
|  | <p>5. 실체는 관련된 일반목적재무제표('재무제표'라고 함)가 국제 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이나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기준서[초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p>   | IFRS S1.8       |
|  | <p><b>[정의]</b></p> <p>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                 |
|  | <p>기후 관련 영향은 실체의 활동이나 관계의 결과로 실체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미합니다.</p>  | GRI 3           |
| 잠재적인 공공부문 특유의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함 (안건 6.2.1과 6.3.2 참조) | <p>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는 각각 기후변화가 실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에는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뿐만 아니라 정책 리더십, 비용 대비 가치, 회계책임성 및 조정, 전달 위험과 같은 기타 공공부문 위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p>   | IFRS S1.7       |

#### 4)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그림 5**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 과정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IPSAS 기준서를 개발하여 일반목적재무제표에 보고된 재무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자문보고서(CP) 개발 단계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9월 IPS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를 승인하였다. 다만, 이 프로젝트의 대상 범위를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적용 범위로 국한시킨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CP 초안 개요에 대한 피드백
  - 프로젝트 개요
  - 재무제표의 목적
-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선택적 접근 방식 허용에 대한 토론

다른 표시 접근 방식을 허용해 주는 것은 각 나라의 고려사항에 따른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향상해 주는 것이다. 인식, 측정 및 최소 공시 요구사항은 선택적 표시 접근 방식에서도 일관된다. 다음 <표 3>에서의 장단점을 토대로 IPSASB에서는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선택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를 향후 자문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표 3**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선택적 접근 방식 허용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재정관리(PFM) 보고체계와의 통합 강화</li> <li>• 다른 공공재정관리(PFM) 보고서 간의 연결 개선 및 조정 단순화</li> <li>• 공공재정관리(PFM) 보고서 간의 공통 언어 사용 및 설명이 이 해도와 의사소통 효율성 향상에 도움</li> </ul> | 공공부문 재무제표의 국제 비교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

새롭게 개발 중인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자문보고서는 IPSAS 1의 기준 조항을 강화하여 재무제표 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관련 기준서에 대한 개정 반영을 포함하여 IPSAS 1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5) 기타 리스유사약정(Other Lease-type Arrangements)

‘기타 리스유사약정’ 프로젝트는 리스 유형 약정과 관련된 리스 관련 회계처리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추가 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공개초안 피드백 단계로 최종 프로젝트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표 4** 리스 관련 시행일자

| 프로젝트/IPSAS 기준서       | 연관 기준서                       | 시행일자                   |
|----------------------|------------------------------|------------------------|
| IPSAS 43 ‘리스’        | 없음                           | 2025년 1월 1일            |
| IPSAS 4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없음                           | 2025년 1월 1일            |
| IPSAS 45 ‘유형자산’      | IPSAS 43, IPSAS 44, IPSAS 46 | 2025년 1월 1일            |
| IPSAS 46 ‘측정’        | 없음                           | 2026년 1월 1일            |
| IPSAS 47 ‘수익’        | 없음                           | 2026년 1월 1일            |
| IPSAS 48 ‘이전 비용’     | IPSAS 47                     | 2026년 1월 1일            |
| IPSAS 49 ‘퇴직연금제도’    | 없음                           | 2026년 1월 1일            |
|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 IPSAS 43, IPSAS 45, IPSAS 47 | 2027년 1월 1일<br>(변동 가능) |
| IPSAS 개선             | IPSAS 43                     | 미확정                    |
| 측정 2차 단계             | IPSAS 46                     | 미확정                    |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본 발표(Final Procurement)에 IPSAS 23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ED 84는 IPSAS 23 '비교환 거래 수익(세금 및 이전)'에 대한 개정 제안과 함께 발행됨
- ED 84는 IPSAS 47 '수익'이 출판되기 전에 발행됨
- IPSAS 47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IPSAS 47은 IPSAS 23의 대체
- IPSAS 23이 대체된 후 최종본 발표 시행일 제안
  - ☞ IPSAS 23은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음
- 최종본 발표에서 IPSAS 47(IPSAS 23 대체) 개정에 대한 조기 적용이 허용됨



## 02 제2차 국가결산 시범작성 용역 수행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제2차 국가결산 시범작성' 용역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다. 결산체계 개편은 2025회계연도를 목표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에 센터가 '국가결산체계 개편 시범결산 지원'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이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을 2023년 4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 하반기에 이번 용역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dBrain+ 시스템 개선 등은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1. 결산보고서 개선

#### 가. 국가재무제표

제1차 시범작성 개편안 재정상태표의 경우, 차입부채의 하위 항목 중 기타이자발생부채를 기타차입부채로 변경하여 기존 기타이자발생부채 중 차입 성격이 아닌 항목(미지급비용, 예수부채 등)은 차입부채가 아닌 기타부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차입부채는 국채, 차입금, 국가채무부담행위, 기타차입부채로 구성되어 국가채무와 성격적 유사성을 높일 수 있었다.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이를 별도의 재정운영표 양식으로 추가하는 1안과 주석 중 하나의 항목으로 보고하는 2안으로 지난 1차 시범작성 시 제안된 바 있으나,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하나의 재정운영표로 추가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안은 총원가, 수익 및 순원가를 분야별 재정운영표에 표시하도록 수정되었다. 또한 관리운영비 하위 항목인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을 삭제하고 관련 성질별 정보를 주석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1차 시범작성 시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으로 제시하였던 항목은 중앙관서 및 기금 재정운영표와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비교환수익 등’으로, ‘기타이전수익’은 ‘기타이전수익 등’으로 수정하였다.

순자산변동표는 체계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식 변경은 없으나, 계정과목 체계(COA) 검토 과정에서 조정항목 중 금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평가손익’ 대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총당부채 산정 과정에서 가정의 변화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을 회계과목으로 변경하였다.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의 표시 과목의 경우 금액의 규모가 큰 항목을 위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나. 기금 및 중앙관서 재무제표

기금 재무제표는 국가재무제표와 양식이 동일하나,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사업순원가를 분야별이 아닌 프로그램순원가로 표시한다. 또한 국세수익은 각 기금 단위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세수익이 표시되지 않는다. ‘조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제시한 국가재무제표와 달리, 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억원’ 단위로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제시하였다.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경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현금흐름표는 기금의 재무제표와 동일하다. 다만 중앙관서는 다른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통합하여 ‘비교환수익 등’을 표시하게 되므로, 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와 달리 ‘비교환수익 등’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표시한다. 해당 항목은 ‘재정운영결과’와 ‘조정항목’ 사이에 표시된다.

## 다. 주석

1차 시범작성 용역 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통합하여 총 22개 항목의 주석을 제시하였다. 이후 분야별 재정운영표가 주 재무제표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주석이 신설되었으며,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및 사회보험보고서를 별책이 아닌 주석의 마지막 항목으로 배치하여 주석 항목은 총 24개로 구성된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와 국가결산보고서의 주석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 대신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금 결산보고서의 경우, 중앙관서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의 양식과 주석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어 별도의 결산작성지침으로 제시하였다.

## 라. 결산개요

1차 시범작성 용역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결산개요를 제시하였으나, 2차 용역에서는 재무결산에 한정된 결산개요를 제시하도록 일부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말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으나 감사원장 메시지의 경우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삭제하였다.

## 2. 계정과목 분리 기준

현행 재무결산 체계는 dBrain<sup>+</sup>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력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정과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시 개편된 계정과목으로 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계정과목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결산서는 전기와 비교 표시하고 있으므로 전기에 발생한 정보를 변경된 계정과목으로 변환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시스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계정과목 개편은 크게 일대일, 다대다, 다대일, 다대다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대일로 대응되는 개편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일대다, 다대일 및 다대다 변경 계

정과목에 대한 분리 및 통합 기준을 제시하였다. 계정과목 개편에 따른 전기금액 분리 기준은 시스템을 통해 분리할 수 있는 부분과 결산담당자에 의해 수기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 3. 주식 작성 업무기준 정의

한국재정정보원 ISP 용역 요구사항에 따라 기금과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양식에는 계정과목 코드, 계산식 등을 함께 기재하여 dBrain+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양식 중 코드와 계산식이 없는 부분은 계정과목 코드 외에 '정보관리항목'과의 연계방식으로 주석이 작성되는 부분과 결산담당자의 수기 작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주석의 생성 방식은 ① 계정과목 코드 및 산식 이용, ② 정보관리항목 등 이용, ③ 결산담당자 수기 입력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① 계정과목 코드 및 산식 이용 유형은 계정과목 코드별로 집계된 금액정보와 당해 금액정보 간의 수식 관계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한 주식 정보이며,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계정과목 금액의 상세 내역을 제공하는 명세서 성격의 주석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② 정보관리항목 등 이용 유형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항목 등의 정보를 통해 작성 가능한 주식 정보이다. 정보관리항목은 시스템이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로서, 주로 감가상각, 내부거래 제거 등 특정 후속 회계처리에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③ 결산담당자 수기 입력 유형은 결산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기입하여 작성할 수 있는 주식 정보이다. 특정 사업의 현황, 계약의 내용 등과 같이 금액 형태로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서술 형식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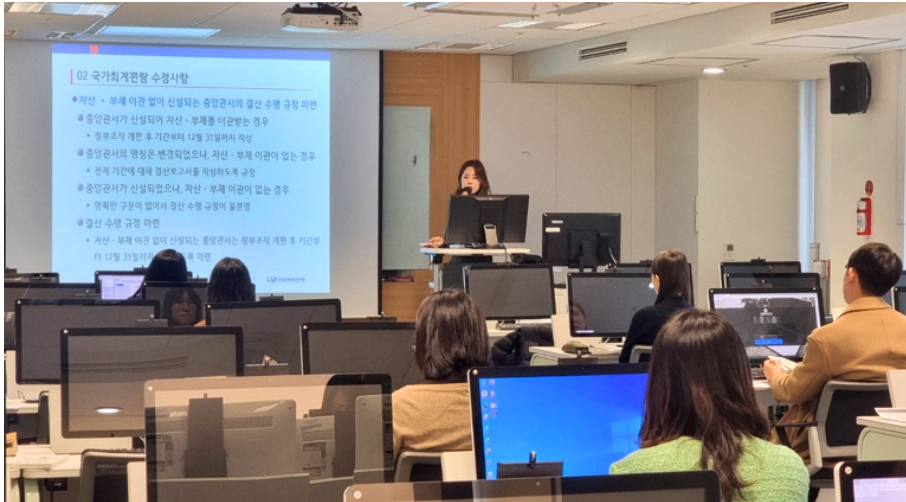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23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23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2023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01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2023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2023. 12. 4.), 한국재정정보원 사용자 교육장

기획재정부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III), (IV)」를 발간하였다.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III), (IV)」는 국가결산 개설, 결산 보고서 작성양식, dBrain+를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들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중앙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33명의 중앙관서 결산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는 결산담당자들에게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제출 일정과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및 2022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2 2023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제11차 국가회계실무 교육(2023. 10. 20.),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6월 21일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을 국가회계 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에서 직접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특히 10월에는 재무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결산실무 과정을 2회(회당 2일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재무결산의 이해,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23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수행 결과, 13회차에 걸쳐 총 958명(전년도 1,018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66점(전년도 4.58), 강사 만족도는 4.69점(전년도 4.61), 교육 환경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4.74점(전년도 4.66)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교육 참여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내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중순부터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 2023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2023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2023. 12. 1.), 소노벨 천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소노벨 천안에서 '2023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합교육에서는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김수영 과장이 결산기간 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이우성 과장이 dBrain<sup>+</sup>의 2023회계연도 결산 절차 및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 윤성호 팀장이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유의사항을 교육하였다.

올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결산담당자 집합교육을 주관한 다섯 번째 해로, 충실한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 내용 그리고 운영진의 행사 지원 등으로 높은 행사 만족도(4.8/5.0만점)를 달성하였다.

## 04 2023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2023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12차시(2023. 11. 28.),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3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일선관서 결산 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12개 도시(경기,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제주, 안동, 광주, 대구, 전주, 창원, 부산)에서 실시하였고, 총 4,064명의 결산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사례, 국유재산 결산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 플러스(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였으며, 향후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정통계 동향



-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IMF의 Climate Change Indicator Dashboard 소개

# 01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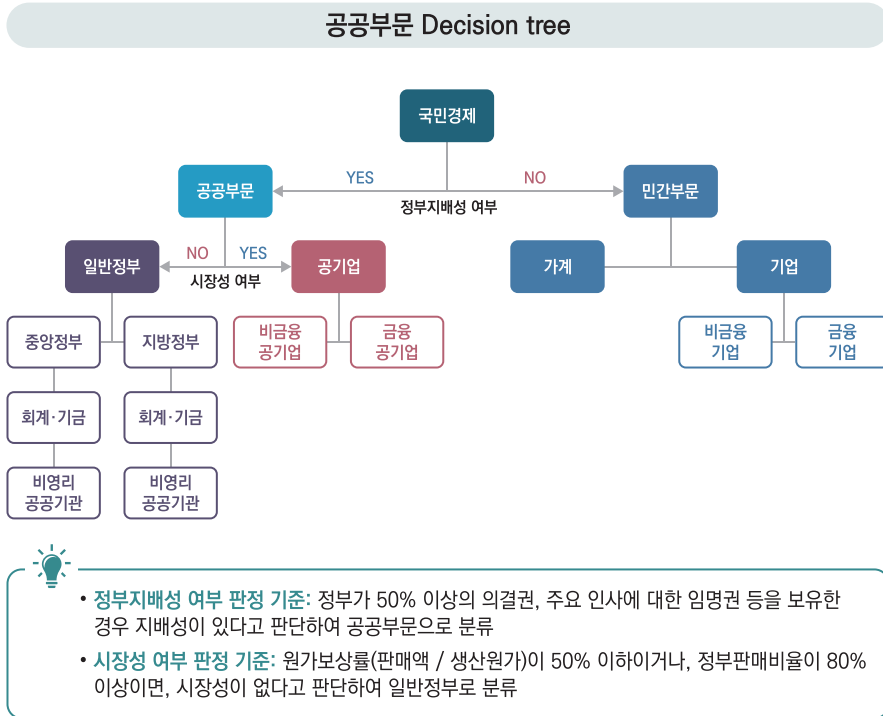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2023년 12월 14일(목)에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 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가. 산출 범위

###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공공부문 Decision tre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 2023, p. 33 [그림 2-3]

2022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과학기술원 등을 포함하여 총 504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46개 기관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58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 나. 공공부문 부채 통계 현황

202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전년(1,427.3조원)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일반정부 부채(D2)가 전년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77.7조원(GDP 대비 2.8%p) 증가하였으며, 두 부문 간의 내부거래는 7.3조원(GDP 대비 0.2%p) 증가하였다.

표 1 공공부문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 구분                     | 2021년(A) |        | 2022년(B) |        | 증감(B-A) |        |
|------------------------|----------|--------|----------|--------|---------|--------|
|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 ◇ 공공부문 부채(= ① + ② + ③) | 1,427.3  | 68.6   | 1,588.7  | 73.5   | 161.4   | 4.9    |
| ○ 일반정부(①)              | 1,066.2  | 51.3   | 1,157.2  | 53.5   | 90.9    | 2.2    |
| ○ 비금융공기업(②)            | 439.7    | 21.1   | 517.4    | 23.9   | 77.7    | 2.8    |
| - 중앙 비금융공기업            | 403.6    | 19.4   | 481.4    | 22.3   | 77.9    | 2.9    |
| - 지방 비금융공기업            | 46.1     | 2.2    | 50.9     | 2.4    | 4.8     | 0.2    |
| - 내부거래                 | △9.9     | △0.5   | △14.9    | △0.7   | △5.0    | △0.2   |
| ○ 내부거래(③)              | △78.6    | △3.8   | △85.9    | △4.0   | △7.3    | △0.2   |

주: 이하 모든 표의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12. 14.(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이하 재정통계 동향 모든 표 동일)



##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각각 88.1조원, 2.9조원 증가하였고,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는 0.0조원 증가하여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90.9조원 증가한 1,157.2조원(GDP 대비 53.5%)이며 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표 2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 구분                     | 2021년(A) |        | 2022년(B) |        | 증감(B-A) |        |
|------------------------|----------|--------|----------|--------|---------|--------|
|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 ◇ 일반정부 부채(= ① + ② + ③) | 1,066.2  | 51.3   | 1,157.2  | 53.5   | 90.9    | 2.2    |
| ○ 중앙정부(①)              | 1,016.2  | 48.8   | 1,104.2  | 51.1   | 88.1    | 2.3    |
| - 중앙 회계 · 기금           | 975.7    | 46.9   | 1,064.6  | 49.2   | 88.9    | 2.3    |
| -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 54.3     | 2.6    | 55.0     | 2.5    | 0.7     | △0.1   |
| - 내부거래                 | △13.9    | △0.7   | △15.4    | △0.7   | △1.5    | 0.0    |
| ○ 지방정부(②)              | 69.9     | 3.4    | 72.8     | 3.4    | 2.9     | 0.0    |
| - 지방 회계 · 기금           | 68.9     | 3.3    | 70.6     | 3.3    | 1.7     | 0.0    |
| · 지방자치단체               | 64.0     | 3.1    | 66.6     | 3.1    | 2.6     | 0.0    |
| · 교육자치단체               | 4.9      | 0.2    | 4.0      | 0.2    | △0.9    | △0.0   |
| -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 2.9      | 0.1    | 3.5      | 0.2    | 0.6     | 0.1    |
| - 내부거래                 | △2.0     | △0.1   | △1.3     | △0.1   | 0.7     | 0.0    |
| ○ 내부거래(③)              | △19.8    | △1.0   | △19.8    | △0.9   | 0.0     | 0.1    |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12. 14.를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

### 가) 중앙정부 부채

2022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1,016.2조원(GDP 대비 48.8%) 대비 88.1조원이 증가한 1,104.2조원(GDP 대비 51.1%)으로 산출되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중앙 회계 · 기금,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중앙정부 부채가 전년 대비 88.1조원 증가한 것은 주로 중앙 회계 · 기금의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 (1) 중앙 회계·기금

2022회계연도의 중앙 회계·기금은 전년 975.7조원(GDP 대비 46.9%) 대비 88.9조원이 증가한 1,064.6조원(GDP 대비 49.2%)으로 산출되었으며, 채무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앙 회계·기금 채무상품 유형별 부채

(단위: 조원)

| 구분       | 2021년(A) | 2022년(B) | 증감(B-A) | 2022년 부채 구성 내용                               |
|----------|----------|----------|---------|--|
| 합계       | 975.7    | 1,064.6  | 88.9    |  |
| ■ 채무증권   | 815.8    | 905.2    | 89.4    | 국채(1,018.6), 공채(21.6), 연기금 등 보유 국·공채(△135.1) |
| ■ 차입금    | 108.8    | 107.7    | △1.1    |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95.5), 민자사업 부채(8.7) 등            |
| ■ 기타 미지급 | 51.1     | 51.7     | 0.6     | 미지급비용(16.8), 미지급금(7.7) 등                     |

(채무증권) 전년 대비 89.4조원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 적자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84.3조원, 외평채 0.6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채 1.7조원 증가와 자기 국·공채 2.8조원 감소에 기인한다.

**표 4** 중앙 회계·기금 채무증권(부채)

(단위: 조원)

| 구분              | 2021년(A) | 2022년(B) | 증감(B-A) |
|-----------------|----------|----------|---------|
| 합계(= ① + ② + ③) | 815.8    | 905.2    | 89.4    |
| ◆ 국채(①)         | 933.8    | 1,018.6  | 84.9    |
| ■ 국고채           | 840.4    | 924.7    | 84.3    |
|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11.2     | 11.8     | 0.6     |
| ■ 국민주택채권        | 82.2     | 82.2     | △0.0    |
| ◆ 공채(②)         | 19.9     | 21.6     | 1.7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19.9     | 21.6     | 1.7     |
| ◆ 자기 국·공채(③)    | △137.8   | △135.1   | 2.8     |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22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2023.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0.7조원 감소하여 차입금이 전년 대비 1.1조원 감소하였다.

## (2)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2022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54.3조원(GDP 대비 2.6%) 대비 0.7조원이 증가한 55.0조원(GDP 대비 2.5%)으로 산출되었다. 전년 대비 증가는 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차입금 및 미지급금 증가 등(1.2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투자회사 차입금 증가 등(0.9조원),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권 순상환 등(△1.3조원)에 기인한다.

## 나) 지방정부 부채

2022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69.9조원(GDP 대비 3.4%) 대비 2.9조원이 증가한 72.8조원(GDP 대비 3.4%)으로 산출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지방 회계·기금,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둘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전년 대비 2.9조원 증가는 지방 회계·기금 1.7조원,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0.6조원 증가와 내부거래 0.7조원 감소에 기인한다.

**표 5** 지방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 구분        | 2021년(A) |        | 2022년(B) |        | 증감(B-A) |        |
|-----------|----------|--------|----------|--------|---------|--------|
|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 ◆ 지방정부 부채 | 69.9     | 3.4    | 72.8     | 3.4    | 2.9     | 0.0    |
| ■ 회계·기금   | 68.9     | 3.3    | 70.6     | 3.3    | 1.7     | 0.0    |
| · 지방자치단체  | 64.0     | 3.1    | 66.6     | 3.1    | 2.6     | 0.0    |
| · 교육자치단체  | 4.9      | 0.2    | 4.0      | 0.2    | △0.9    | △0.0   |
| ■ 비영리공공기관 | 2.9      | 0.1    | 3.5      | 0.2    | 0.6     | 0.1    |
| ■ 내부거래    | △2.0     | △0.1   | △1.3     | △0.1   | 0.7     | 0.0    |

### (1) 지방 회계·기금

2022회계연도의 지방 회계·기금은 전년 68.9조원(GDP 대비 3.3%) 대비 1.7조원이 증가한 70.6조원(GDP 대비 3.3%)으로 산출되었다. 지방 회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회계·기금의 부채가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2.6조원 증가한 반면, 교육자치단체는 0.9조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전년 64.0조원 대비 2.6조원 증가한 66.6조원으로 지방채 및 차입금 등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별 증가액이 큰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1.3조원), 서울(0.7조원), 제주도(0.4조원) 등이다.

**(나) 교육자치단체**

전년 4.9조원 대비 0.9조원 감소한 4.0조원으로, 장·단기차입금 및 민자사업(BTL) 등이 감소하였다.

**(2)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2.9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한 3.5조원으로, 0.6조원 증가는 주로 채무증권 증가에 기인하며, 과천도시공사(0.2조원) 및 부산교통공사(0.2조원)의 사채 등이 증가하였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439.7조원(GDP 대비 21.1%) 대비 77.7조원 증가한 517.4조원(GDP 대비 23.9%)으로 집계되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비금융공기업,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전년 대비 77.7조원 증가는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77.9조원,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4.8조원, 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가 5.0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403.6조원 대비 77.9조원이 증가한 481.4조원으로 산출되었다. 부채가 증가한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국제연료가 상승의 영향으로 부족자금 조달 등을 위해 46.2조원이 증가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증가 등에 따라 17.1조원이 증가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6.5조원이 증가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차입금 증가 등으로 4.8조원이 증가하였는데, 부채가 증가한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4.0조원), 서울주택도시공사(0.5조원) 등이다.

## 라. 부채 유형별(D1, D2, D3) 추세 분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 유형별 증감(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부채(D3) 증가와 일반정부 부채(D2)의 증가 규모가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2022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국제연료가 상승의 영향으로 한전·발전자회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 증가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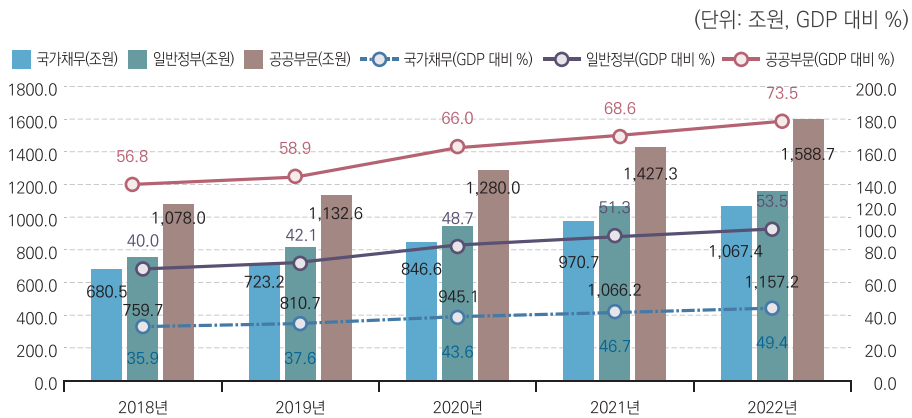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2019년) 1.7%p → (2020년) 6.0%p → (2021년) 3.1%p → (2022년) 2.7%p

일반정부 부채(D2): (2019년) 2.1%p → (2020년) 6.6%p → (2021년) 2.6%p → (2022년) 2.2%p

공공부문 부채(D3): (2019년) 2.1%p → (2020년) 7.1%p → (2021년) 2.6%p → (2022년) 4.9%p

**그림 2** 부채 유형(D1, D2, D3)에 따른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12. 14. 및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 2023. 11.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02 IMF의 Climate Change Indicator Dashboard 소개



### 가. Climate Change Indicator Dashboard 소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기후변화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Climate Change Dashboard’(이하 ‘기후변화 지표 현황’)을 공개<sup>1)</sup>하였다. 기후변화 지표 현황은 IMF가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개설한 기후포털사이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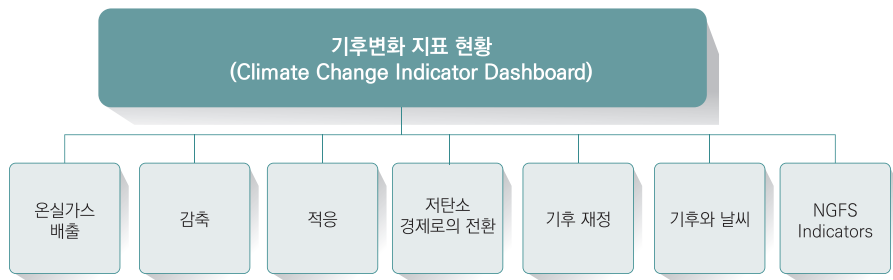
기후변화 지표 현황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기후금융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제공한다. 각 지표는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IMF 회원국의 국가별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가, 지역,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중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정지표라고 볼 수 있는 환경세, 환경보호 정부지출 통계의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세는 IMF 회원국 중 126개국, 환경보호 정부지출은 130개국의 자료가 공시 중이다.

1) <https://climatedata.imf.org/>

기후변화 지표 현황은 사용자들이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도구를 제공하며,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도 제공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다양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지표 현황에 공시된 지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변화, 국가별 온실가스 목표 현황 등이 공시되며, 감축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재정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 환경세, 환경보호 정부지출, 화석연료 보조금 등의 통계가 공시된다.

**그림 1** 기후변화 지표 현황 공시 지표



출처: IMF, Climate Change Dashboard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참고로 기후변화 지표 현황에 공시된 기후변화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후변화 지표 현황 주요 지표

| 구분                                    | 주요 지표                      | 주요 내용  |
|---------------------------------------|----------------------------|--|
| 온실가스 배출<br>(Greenhouse Gas Emissions) | 온실가스 배출계정                  | 대기 중 주요 온실가스 농도 추이를 시각화하여 이산화탄소(CO <sub>2</sub> ), 메탄(CH <sub>4</sub> ), 이산화질소(N <sub>2</sub> O) 등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                                       | 국가 인벤토리 및 목표               | 파리협정 및 다양한 국제 기후협약의 이행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국가별 글로벌 기후 대응에 대한 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 CO <sub>2</sub> 배출 강도 및 승수 | 국가별, 산업별 CO <sub>2</sub>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음   |
| 감축<br>(Mitigation)                    | 환경세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에너지세, 운송세, 오염세, 자원세로 구분됨  |
|                                       | 환경보호 지출                    | 정부기능분류(COFOG)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각 정부가 환경보호 조치에 지출하는 지표로, 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공해 방지, 생물종 다양성 및 경관 보호, 환경보호 R&D,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계정이 포함됨 |

표 1 의 계속

| 구분                              | 주요 지표                 | 주요 내용   |
|---------------------------------|-----------------------|---|
| 감축<br>(Mitigation)              | 화석연료 보조금              | 환경보호를 방해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을 모두 정량화하여 총 화석연료 보조금을 산출함.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평가시 활용함 |
| 적응<br>(Adaptation)              | 기후 관련 재해 빈도           | 기후 관련 자연재해(가뭄, 극한기온, 홍수, 산사태, 태풍 등) 발생 건수 확인  |
| 기후 재정<br>(Climate Finance)      | 녹색 채권                 | 기후 완화 및 적응 도구로서 법인 설립 국가, 수익금 사용, 통화 유형 및 발행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음  |
| 기후와 날씨<br>(Climate and Weather) | 표면 온도 변화              | 연도별 평균 표면 온도 모니터링   |
|                                 | 대기 CO <sub>2</sub> 농도 | 월별 CO <sub>2</sub> 농도 모니터링  |
|                                 | 평균 해수면 변화             | 평균 해수면의 변화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IMF, Climate Change Dashboard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IMF에서 공시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지표를 통해 국제 기후협약의 이행 상황, 친환경 정책 및 혁신으로 국가 및 기업의 친환경 정책, 기술 혁신, 녹색 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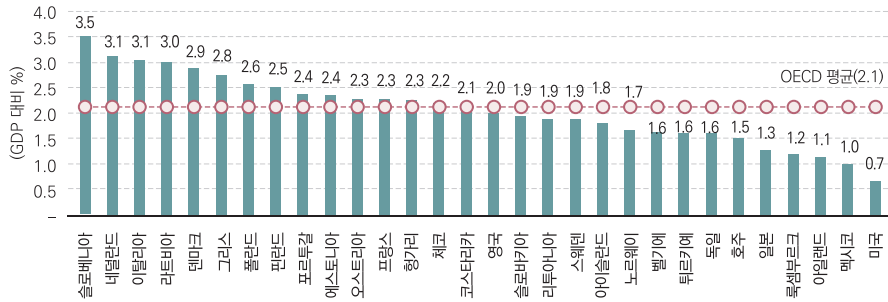
## 나. Climate Change Dashboard 국제비교

IMF 기후변화 지표 현황 자료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재정지표라고 볼 수 있는 환경세, 환경보호 정부지출 통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환경세

환경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로, 에너지세, 운송세, 오염세, 자원세로 구분한다. 환경세의 경우 슬로베니아가 GDP 대비 3.5%로 가장 높고, 이어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으로 높다.

그림 2 환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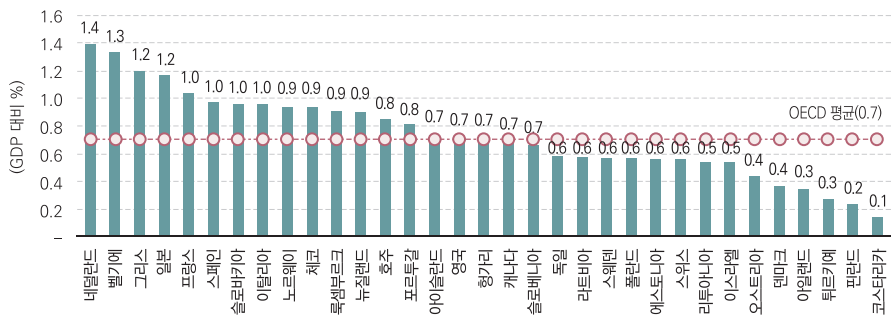


출처: IMF, Climate Change Dashboard

### 환경보호 지출

정부가 환경보호에 지출하는 지표로, 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공해 방지, 생물종 다양성 및 경관 보호, 환경보호 R&D,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계정을 포함한다. 환경보호 지출의 경우 네덜란드가 GDP 대비 3.1%로 가장 높고, 이어 벨기에, 그리스 순으로 높다. OECD 회원국 중 환경보호 정부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핀란드, 튀르키예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 환경보호 지출



출처: IMF, Climate Change Dashboard

국가회계  
재정토계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개발
- 2023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

## 01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을 위탁 받아 202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교육은 지난해 시범교육의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회계교육 커리큘럼의 개선 및 교육 교재 콘텐츠 추가 개발, 신규 외부 강사의 확대를 중점 실행과제로 추진한 후 실시하였다.

회계교육의 커리큘럼 개선을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법인세회계 과목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시간을 기존 14시간(2일)에서 21시간(3일)으로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외부 강사진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전규안 교수(송실대), 한승엽 교수(홍익대), 선우희연 교수(세종대), 이지훈 회계사(진일회계법인) 외에 최연식 교수(경희대), 엄기중 교수(순천대)와 허웅 회계사(이정회계법인), 방민식 회계사(이촌회계법인)가 신규 강사로 참여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장소 및 참석 희망 인원 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울 3회(섬유센터, 스페이스웨어, 은행회관), 세종 1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총 4회(9~11월, 80명 내외 규모) 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322명이 참여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대상 기관인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47개가 교육을 신청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 및 공공기관 외 기관(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기동공사, 지방공기업 등) 29개가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1**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일정

(단위: 명)

| 차시 | 장소                | 일정                  |                       | 참석 인원 |
|----|-------------------|---------------------|-----------------------|-------|
|    |                   | 신청기간                | 교육기간                  |       |
| 1차 | 세종<br>(정부세종컨벤션센터) | 2023. 9. 4.~9. 19.  | 2023. 9. 20.~9. 22.   | 57    |
| 2차 | 서울<br>(섬유센터)      | 2023. 9. 4.~10. 10. | 2023. 10. 11.~10. 13. | 84    |
| 3차 | 서울<br>(스페이스웨어)    | 2023. 9. 4.~10. 24. | 2023. 10. 25 ~10. 27. | 83    |
| 4차 | 서울<br>(은행회관)      | 2023. 9. 4.~11. 7.  | 2023. 11. 8~11. 10.   | 98    |

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공지사항 「202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 2023. 7. 3., <https://www.kipf.re.kr/pedu/index.do>

교육과정은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유무형자산 및 리스, 수익 등 회계이론과 연결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법인세회계, 결산서 작성방법, 외부 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사흘간 21시간으로 운영하였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커리큘럼

| 차시  | 교육과목             | 주요 내용                                 |
|-----|------------------|---------------------------------------|
| 1일차 |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 1. 회계의 기초<br>2. 재무제표의 종류<br>3. 회계순환과정 |
|     | 유무형자산 및 리스       | 1. 유무형자산<br>2. 사용권자산(리스)              |
|     | 수익               | 1. 수익인식모형<br>2. 수익인식 회계처리             |

**표 2** 의 계속

| 차시  | 교육과목                       | 주요 내용   |
|-----|----------------------------|---|
| 1일차 | 채권(공채, 회사채),<br>총당부채와 우발부채 | 1. 화폐의 시간가치<br>2. 채권, 총당부채, 우발부채                                |
|     | 정부보조금                      | 1.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
|     | 종업원급여                      | 1. 단기 종업원급여<br>2. 퇴직급여  |
| 2일차 |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 1.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
|     | 연결재무제표                     | 1. 연결재무제표 개요<br>2.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습<br>3. 연결재무제표 주요 이슈<br>4. 별도재무제표 |
| 3일차 | 현금흐름표                      | 1. 현금흐름표 의의<br>2. 현금흐름표 내용<br>3. 작성 실습                          |
|     | 법인세회계                      | 1. 법인세회계의 의의<br>2. 법인세 주식 작성 실습<br>3. 법인세회계 주요 이슈               |
|     | 결산서 작성방법                   | 1. 결산개요<br>2. 회계처리, 결산, 주식 작성 유의사항                              |
|     | 외부 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 1.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

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공지사항 「202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 2023. 7. 3., <https://www.kipf.re.kr/pedu/index.do>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와 유사하게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교육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설명이 유익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 교육도중에 중도이탈자에 대한 불만과 교육과정이 교육생들의 수준에 맞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차후 교육을 진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23년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
| 교육과정 | 4.38 | 4.21 | 4.28 | 4.33 |
| 교육환경 | 4.46 | 4.32 | 4.34 | 4.41 |
| 응답률  | 73%  | 88%  | 89%  | 87%  |

주: 5점 척도, 수료자(301명) 중 1차(37명), 2차(71명), 3차(67명), 4차(82명) 응답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특성에 맞는 회계교육을 개발하여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1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서울 섬유센터)



제3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서울 스페이스쉐어)



제4차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서울 은행회관)

## 0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개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오프라인 교육 참석이 어려운 회계담당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동영상을 개발하였다.

회계교육 동영상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을 통해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총 74명이다. 설문 항목은 ① 정부보조금, ② 현금흐름표, ③ 종업원 급여, ④ 유무형자산 및 리스, ⑤ 기타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집계 결과(응답자 74명) 1순위는 ① 정부보조금, ② 현금흐름표, ④ 유무형자산 및 리스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2순위는 ④ 유무형자산 및 리스, ② 현금흐름표, ① 정부보조금 순으로 많았다.

**표 1** 온라인 동영상 주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 ① 정부보조금 | ② 현금흐름표 | ③ 종업원급여 | ④ 유무형자산 및 리스 | ⑤ 기타 |
|-----|---------|---------|---------|--------------|------|
| 1순위 | 24      | 24      | 5       | 19           | 2    |
| 2순위 | 14      | 15      | 11      | 30           | 4    |

주: 결산담당자 74명 응답

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수요가 높게 집계된 현금흐름표 온라인 동영상 제작을 진행 중이다. 강의는 PPT를 이용한 이론강의 35분, 엑셀을 이용한 실습강의 40분으로 총 2부로 구성하였다. 강사는 현금흐름표 교재 개발에 참여한 방민식 회계사(이촌회계법인)이며, 촬영 및 편집은 외부 전문 업체(다산에듀)에 의뢰하여 진행 중이다. 12월 1주 차에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검수 및 수정을 통해 12월 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sup>1)</sup>에 게시 예정이다.

또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개발(2023. 12. 8.), 세종 다산에듀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https://pear.kipf.re.kr/bbs/pedu\\_Resource\\_CyberEdu.do](https://pear.kipf.re.kr/bbs/pedu_Resource_CyberEdu.do)

## 03 2023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5일(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84개 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2개, 국가회계기준 적용 3개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의 결산 업무와 관련한 당부와 격려 말씀에 이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결산서 사전제출 등 전반적인 결산 유의사항과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지서티가 공공기관 회계결산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교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실무 관련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표 1** 2023회계연도 회계 및 결산교육 세부 일정

| 시간          | 주요 내용                                 | 발표자                    |
|-------------|---------------------------------------|------------------------|
| 13:30~13:55 | • 교육자 등록 및 입실                         |                        |
| 13:55~14:00 | • 인사 말씀                               | 출자관리과장                 |
| 14:00~14:40 |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br>• 결산 이슈사항 회계처리 방안 | 정지윤 회계사<br>(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14:40~15:20 | • 주요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주의사항                | 한소영 회계사<br>(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15:20~15:30 | • 휴식                                  |                        |
| 15:30~16:30 | • 공공기관 회계결산시스템 개요 및 사용방법 설명           | 이지서티<br>(시스템 개발업체)     |
| 16:30~17:00 | • 질의 및 응답                             |                        |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이 수록된 교육 교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sup>1)</sup>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3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2023. 12. 5.),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https://pear.kipf.re.kr/bbs/pedu\\_Resource\\_Edu.do](https://pear.kipf.re.kr/bbs/pedu_Resource_Edu.do)

## 04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의무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를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2017년 제정, 2018년부터 적용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최초 발간한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세법 개정사항 및 추가 주석사례 등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개정판에서는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공시한 결산서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법인 수, 공익법인 자산 및 부채, 공익법인 수익과 비용 등 공익법인의 주요 재무현황 요약자료를 사업유형별<sup>1)</sup>로 구분해서 추가하였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sup>2)</sup>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sup>3)</sup>에 게시되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표 1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목차

| PART | 목차           |
|------|--------------|
| 1    |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
| 2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이해 |
| 3    |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
| 4    |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
| 5    | 특수한 회계처리     |

1)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기타

2)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7137>

3) [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Center/view.do?serialNo=527137](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Center/view.do?serialNo=527137)



# 센터 동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MOU 체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MOU 체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2월 11일(월)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육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상호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안이슈 발굴, 실현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등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료·보고서·간행물 및 기타 자료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세미나 개최 및 각 기관의 세미나, 콘퍼런스, 심포지엄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회계 관련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문 등 공동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 및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세미나



-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 202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2023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 가. 개요

- 주 제: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 일 시: 2023년 11월 1일(수) 14:00~17:4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기조연설]

[발표] 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

#### [주제발표 I]

[발표1] 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 교수

[발표2] Scott Showalt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II]

[발표 1] 한동숙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발표 2] 심규헌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발표 3] 정기종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부장

[발표 4] 이지현 국민연금공단 책임운영역

#### [종합토론]

[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김수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박혜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 서기관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센터장

이보화 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공공기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일(수)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후원으로 개최한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였던 과거 행사와 달리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특히, 올해 국제심포지엄에는 국제기구, 학계, 정부, 유관기관 및 회계전문가 등 현장과 온라인으로 총 242명이 참석하였다.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가운데,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를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로 선정하여 공공부문 기후 관련 ESG 보고 기준 개발과 ESG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및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과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이어 세다르 일마즈(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의 기조연설과 2개 세션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다르 일마즈(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가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보고를 주제로 공공부문 ESG 보고의 중요성과 관련 도전과제 및 정책제언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주제발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드레아스 버그만(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 교수가 공공부문의 특성과 보고실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재무보고 기준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어 스콧 쇼월터(Scott Showalt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가 미국 공공부문의 ESG 보고 지침 및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 공공부문 회계기준 수립 기관의 ESG 보고 지침 논의 동향을 설명하고,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 시 기준제정기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동숙 충남대학교 교수가 ESG 공시와 평가제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ESG 공시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ESG 경영 추진 체계와 기후 관련 ESG 보고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박혜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 서기관,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센터장 및 이보화 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제도상 문제점과 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과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으며, 민간분야와는 별도의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보고 기준 마련 시, 국제기구(IPSASB)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면서, 기관별 고유 사업, 수익구조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 및 혜택을 고려한 실익 측면의 공시 항목 규정 및 기존 공개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웹 국제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1IUVDhpTU1k&t=130s>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4CpYe59Wcb4&t=1256s>

## 나. 발표자료 주요 내용(요약)

### [기조연설]

#### 발표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보고  
(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

#### ● 공공분야 ESG 보고의 중요성

- 급변하는 기후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면서 투자자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민간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ESG 정보 보고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시민, 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야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대한 기여 등과 관련한 ESG 정보의 요구가 증대됨

#### ● 공공분야 보고실체의 핵심적인 특성

- 보고실체는 세금 수취나 자본시장 대출 등으로 구성원으로부터 자원을) 조달하고, 구성원에게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함
-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한 재무보고 책임이나 의사결정 목적으로 실체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용자와 자원 제공자가 존재함

#### ● 공공분야의 보고실체 정의 관련 도전과제

- 공공부문은 큰 규모와 복잡한 위계질서 등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고실체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의 정보 공시 규제가 미약함
- 국가 차원에서 취합된 정보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개별 정부 부처, 기관, 프로그램별 정보 보고가 유용할 수 있음

## ●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세계은행의 활동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후변화와 개발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핵심 진단보고서로 국가기후개발보고서(CCDRs)<sup>1)</sup> 평가를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 보고서 평가를 통한 ISSB 기준 도입 제언 공유
  - 지속가능성 국제 재무보고 기준의 단계적 이행 및 보고실체의 점진적 공시 참여
  - 중대성 중심의 접근법 권고 및 이해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우선 공유
  - 베이스라인 지표 수립, 데이터 가용성 개선 및 공유 증진
  - 정보 작성 템플릿과 지침 제공을 통한 보고의 간소화 및 일관성 추구
  - 역량 강화 지원 및 협업과 동료 학습을 통한 기관별 전문성 강화 등

## ● 정책 제언

- 지속가능개발 요소를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및 보고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협업 필요
- 공공기관의 전문지식과 제도적 역량 함양을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니셔티브 설계 및 이행
- 공공부문 회계 개혁과 성과감사를 통한 학습 및 활용 등

1) 국가기후개발보고서(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s: CCDRs)

## [주제발표 I]

### 발표 1

공공부문 특성과 보고실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속가능성 재무보고 기준 개발  
고려사항(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 교수)

#### ● ESG 공시기준 동향

- (GRI) 1989년, 미국의 대형 유조선의 원유 유출 사건을 계기로 1997년에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가 설립되어 기업에 책임 관련 보고를 촉구하였으며 기준은 공통, 부문별 및 주제별 등 세 가지로, 이중중대성 접근법 채택
- (IFRS S1, S2)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요구사항이고, S2는 기후 관련 공시이며, 재무적(단일) 중대성만을 고려하고, 보고실체는 재무제표와 동일
  - S1의 보고 범위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이고, S2는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위험 및 기회이며, 공시 항목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동일
- (EU CSRD) 비재무적 보고 지침이 적용되는 상장기업이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 등에 적용되며, IFRS와 달리, 이중중대성 접근법을 채택. 2023년 7월,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12개 지침을 승인하였으며, 2024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 예정
- (IPSASB) 2023년 5월, RPG 1(실체 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 보고), RPG 3(서비스 성과 정보의 보고) 개정안 공개, 기준 제정 작업 착수 결정(6월),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브리프 승인(6월), 2024년 하반기 중 공개초안 공개 및 2025년 최종 기준 발표 계획

####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위한 공공부문 특성

- (공공부문 특징) IPSASB 개념체계 서문에 기술된 공공부문 특성 대부분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적용되나, 규제적 역할 특성의 경우 명확화 필요
  - 공공부문의 특성은 비교환 거래, 승인 예산, 공공부문 프로그램의 성격 및 지속성, 자산과 부채의 성격 및 목적, 규제적 역할, 국제기준 재정통계와의 관계 등 6가지로 정의됨

- 파리협약 채택으로 개별 정부기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보고가 필요하므로, 실체의 규제적 역할의 특성에 공공부문 보고실체는 주체별 특정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를 포함하는 보고 의무를 지니는 것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사례조사) 영국, 뉴질랜드 및 스위스<sup>2)</sup> 등 국별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국가 규제는 IPSASB 개념체계의 공공부문 특성을 명백히 고려하지 않으며, 반영 수준 또한 상이함
  - (영국) 재무보고서 내에 지속가능성 재무정보(6장)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 범위는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임. 녹색정부협약(Greening Government Commitments)<sup>3)</sup>과 국가재무보고매뉴얼(FreM) 등의 국가 규제는 IPSASB 개념체계의 공공부문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FreM은 IFRS 개념체계(4.2.2.)만을 고려
  - (뉴질랜드) 기후 경제 및 재정 평가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 범위는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임. 비영리목적실체(Public benefit entities: PBE)의 재무보고에 적용되는 비영리목적실체(PBE) 개념체계는 IPSASB 개념체계의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하고,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이를 고려하지 않으나, 기후 관련 공시 보고실체는 재무보고 실체와 동일하므로 암묵적으로 공공부문 특성을 고려한다고 판단
  - (스위스)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으며, IPSAS RPG1(RPG 1.15)에 따라, 통계부문에 기반한 일반정부부문(GGS)을 중점으로 보고

2) IPSAS와 발생주의 회계를 활용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를 이행하는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3개국 사례 분석 진행

3) 녹색정부협약(Greening Government Commitments: GGC)은 영국 정부 부처 및 협력 기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의미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reening-government-commitments-2021-to-2025/greening-government-commitments-2021-to-2025>, 검색일자: 2023. 12. 19.

##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위한 보고실체 특징

- (보고실체 특징) IPSASB 개념체계에 따르면, 보고실체는 구성원으로부터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원을 조달하고, 구성원들의 혜택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함. 또한, 보고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존재해야 하며, 보고실체는 단일 혹은 그룹으로 구분됨
- (국가별 보고실체 특징) 지속가능 보고 목적의 보고실체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지속가능 보고 기준 마련 시 보고실체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영국) 일반정부부문(GGS)과 국가재무보고매뉴얼(FreM)은 그룹 보고 실체를 정의하나,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단일 보고실체를 정의함. 그룹 및 단일 보고실체는 IPSAS 보고실체 요구 조건을 충족
  - (뉴질랜드) 재무보고와 동일한 그룹 보고실체이나, 보고실체 및 전체 국가 차원 보고 등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함
  - (스위스) IPSAS RPG1(RPG 1.15)에 따라, 통계부문에 기반한 일반정부부문(GGS)을 중점으로 보고

## ● 정책 제언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광의의 접근을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고려
- GRI나 CSRD 같은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제언
- 이중중대성 접근법 권고
- 지속가능 보고 반영을 위한 개념체계 및 서문 재정비
- 국가별 법적 보고 의무로 인한 전체 경제 상황 반영을 위해, 전체 국가 차원과 보고실체 보고 간의 관계 규명 및 전체 국가 및 보고실체 모두에 대한 정보 공시 고려
- 스위스는 RPG1을 기반으로 보고실체를 일반정부부문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므로, 보고실체 정의 검토

**발표 2** 미국 공공부문의 ESG 보고 지침 및 시사점  
(Scott Showalt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

● 미국 공공부문 회계기준 수립 기관(FASAB 및 GASB)의 활동

■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의 활동

- 2022년 5월, 기후 관련 재무보고에 적합한 연방재무회계기준에 대한 Staff Paper<sup>4)</sup>를 공개하여, 기후 관련 사건 혹은 위험에 대한 보고와 회계처리에 적용 가능한 FASAB Statement를 소개하고, ESG 위험이 자산, 부채 및 기타거래 등 재무회계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 최근, IFRS S2 기반으로 기후 관련 재무보고를 개선하자고만 언급

■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의 모니터링 활동

- 2022년 5월, 정부회계기준과 ESG 요소의 교차점에 대한 White Paper<sup>5)</sup>를 공개하여 ESG 세 가지 요소별 회계책임성을 평가하였으며, 기준 제정기구들의 ESG 보고 지침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환경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 개발을 고려 중

- GASB와 FASAB 모두 IPSASB처럼 기후 관련 ESG 공시기준을 발표할 계획은 없으며, 일반적인 재무보고를 할 때, ESG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

● IPSASB 역할

- GRI와 IFRS S1, S2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마련 연구를 추진 중임

4) FASAB,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aht May Be Relevant to Climate-Related Financial Reporting," [https://files.fasab.gov/pdf/finance/finance\\_related\\_fin\\_reporting\\_staff\\_paper\\_2022.pdf](https://files.fasab.gov/pdf/finance/finance_related_fin_reporting_staff_paper_2022.pdf), 검색일자: 2023. 12. 19.

5) GASB,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tters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https://gasb.org/document/blob?fileName=ESG%20Memo%20FINAL%2005312022.pdf>, 검색일자: 2023. 12. 19.

## ●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 시 기준 제정기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

- ESG 기준 제정 권한
  - 개념체계 및 거버넌스 문서 규정과 일관된 방식으로 ESG 관련 보고 기준을 수립할 권한 필요
- ESG 보고에 포함되는 정보 유형
  - ESG 관련 정보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반영 필요
- ESG 관련 정보의 기존 개념체계 적용 여부
  - 재무제표 등에 ESG 정보를 반영하거나 보완을 위해 개념체계 변경 및 확장 가능성 존재
- 이중중대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지침 제공
  - ESG 관련 정보 보고 범위 설정에 있어 중대성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며,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 인식·측정·보고 기준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개념체계에 반영 필요
- ESG 정보의 위치
  - ESG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측정 정보에 따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재무상태표, MD&A 등)와 기타 보고서 등에 표기될 수 있으며 일률적인 지침은 없음

## [주제발표 II]

**발표 1** 공공부문의 ESG 공시와 평가제도 구축 방안(한동숙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 공공기관의 ESG 관련 보고 현황

-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동
  - 공공기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기관의 ESG 전략 및 과제 심의, 성과평가, 위험 검토 및 ESG 경영 관련 의사결정 추진
  -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연례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와 사회적 가치 실현 보고서 등을 발간, 세계의 주요 공적연기금은 투자 대상 기업에 ESG 경영 전환 요구

- ESG 공시 프레임워크
  - 공공기관이 연계된 중앙집권적인 공시시스템(ALIO)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4회 공시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공시 항목을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기준 개정
- ESG 관련 통합공시 항목의 개정
  -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사용량 등의 환경보호 항목 추가 및 Scope 3까지 점진적 확대 공시 등
  - **(사회)** 정보보호, 인권 및 동반성장 평가에 대한 정보 공시 확대 등
  - **(지배구조)**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내부 감사 부서 현황과 청렴도 평가 결과 항목 추가 등
  - **(카테고리)** ESG 공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4개 카테고리 조정
    - \* (변경) 기관 운영, ESG 운영, 성과 관리, 대내외 평가 등 4가지
  - 일관적인 공시 항목 요구는 부담이 크므로 의무적 공시 항목과 자율적 공시 항목으로 구분
-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ESG 관련 요소를 포함하며, 평가 결과는 공시되어 있고, 성과보너스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침
  - 환경 분야 지표는 사회적 책임 지표의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3개 세부 지표로 구성

## ● 정책 제언

- 공시 및 평가 시스템은 개별 기관 활동의 집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회계책임성 실현
- 초기에 개발된 지침은 영구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개선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활용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내외적으로 논의된 기준에서 거시적 수준의 용어 간 일관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 발표 2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 현황(심규현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 ● ESG 경영정보 공시

- 한국가스공사는 상장기업으로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ESG 관련 정보를 ALIO 시스템에 통합 공시하여 정부 정책을 이행함

### ● ESG 경영 추진체계

-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은 9개 단계로 구성

\* (1) 이중중대성 평가 + (2) 벤치마크(갭분석) → (3) 목표 설정 및 전략과제 정립 → (4) 의견수렴 → (5) 이행과제 발굴·ESG 추진계획 수립 → (6) 실행 → (7) 공시<sup>6)</sup>·공개 → (8) 평가<sup>7)</sup> → (9) 성과분석 및 환류

#### ■ 이중중대성 평가

- 공사와 관련성이 높은 ESG 이슈 풀을 구성하여, 환경·사회적 영향도와 재무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공사와 관련된 ESG 핵심 이슈를 도출

\* (절차) ESG 이슈 풀 구성 → 이슈 풀 영향도 평가(환경, 사회, 재무) → 이슈 풀 순위화 → ESG 핵심 이슈 선정

### ● 기후 관련 ESG 보고

- 기후 관련 ESG 정보를 ALIO 통합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별도 발간하며, 한국거래소에 자율공시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공시 항목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용수사용량, 환경법 및 규정 위반 현황,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추진 계획, 기후변화 대응 조직·위험관리·대응전략,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대기 및 수질오염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량, 생물다양성 평가 현황, 친환경 구매 현황 등이 있음

6) 한국거래소, 알리오, 홈페이지 공시

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한국ESG기준원, MSCI 등

### ■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대응

- **(위험관리)** 위험 식별, 위험 규명, 위험 평가, 위험관리 등의 4개 단계로 진행하며, 먼저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위험을 식별하고, 화석연료 규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위험을 규명한 후, 중대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식별·평가된 위험에 대해 각 부서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는 위험관리 절차로 진행
- 중대성 평가를 통해 특정한 잠재적 위험·기회를 파악하고, 위험·기회별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함

### 발표 3 한국지역난방공사 ESG 정보공시 사례 발표(정기종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부장)

#### ● ESG 경영체계 수립

- 공공기관 및 상장사로서 정부 및 자본시장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여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ESG 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
  - **(경영전략)** '환경과 사람을 향하는 ESG 리더' 비전 달성을 위해 (E) 청정 미래환경 조성, (S) 안전·포용 사회 구현, (G) 지속가능경영 선도 등의 3대 전략방향과 이에 따른 12대 전략과제 및 6대 핵심 KPI<sup>8)</sup>를 설정
  - **(추진조직)** 위원회로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조직으로 ESG 전담조직 및 협의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

#### ● 지속가능경영공시

- 200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12년)을 시작으로 UNGC COP 보고서(2013~2019년), 사회책임경영보고서(2017~2019년)를 거쳐 현재 ESG 보고서(2020~2022년) 발간

8) 핵심성과목표 2026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A등급, 일자리 창출 3.5만명(누계), 종합청렴도 1등급, 탄소배출 원단위 4.1% 감축, 안전관리등급 1등급, 국민소통지수 92점

## ● 이중중대성 이슈 도출

- GRI Standards 2021 도입에 따라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 리스크 관리가 중점이었던 기존 평가방법론을 확장하여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한 이슈 도출

### ■ 평가 프로세스

- (1) ESG 풀 구성: 국제표준, ESG 평가 지표 및 트렌드 등 분석을 통해 31개 이슈풀 구성
- (2) 영향분석: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검토, 미디어·벤치마킹 분석 등을 통한 사회·환경적·재무적 영향분석 수행
- (3) 10대 중대 ESG 이슈 선정: 이슈별 사회·환경적 영향도와 재무적 영향도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 실시 후 10대 중대 ESG 이슈 선정

\* (기후 관련 이슈)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설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열에너지 저탄소 인증 등 ESG 탄소중립 기여, ESG 환경경영 강화,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자원수급 및 운영 등

### ■ 평가 프레임

-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관련도 평가)로 다양한 이슈가 공사에 관련되었는지 평가하고, 2단계(중요도 평가)로 관련 이슈가 공사와 이해관계자에 중요한 정도를 평가함

## 발표 4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과 기후변화(이지현 국민연금공단 책임운영역)

## ● 일반 현황

- 2021년 3월, 글로벌 책임투자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121.3조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책임투자원칙(PRI) 서명 기관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3,826개 이상을 기록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이행원칙은 ESG 투자와 주주권 행사로 구분되며,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종류     | 정의   | 이행 여부 |
|--------|--------|--|-------|
| ESG 투자 | ESG 통합 |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 함께 고려                    | 이행    |
|        | 스크리닝   | ESG 관점에서 긍정·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특정 산업군을 투자후보군에 포함·제외    | 이행 예정 |
|        | 테마투자   | 위험조정수익과 ESG 성과를 동시에 추구                         | 미이행   |
| 주주권 행사 | 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 이행    |
|        | 주주활동   | 비경영참여 주주활동(기업과 대화 등), 경영참여 주주활동(주주제안 등), 소송 제기 | 이행    |

### ● 주요 활동 내용

#### ■ ESG 통합 전략

- 기업별 ESG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 채권(회사채 등) 직접 운용 시 ESG 평가 결과(점수, 등급 등)를 투자가능종목군(IU) 신규 편입 및 투자종목 점검 등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함

\* 평가체계는 14개 항목과 61개 지표로 구성되며, 기후변화 항목으로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에너지 사용량 평가 등이 있음

#### ■ 주주활동(중점관리 사안)

- 지분율 5% 또는 보유비중 1%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중점관리 사안별\*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주주활동 수행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 (기후 관련 중점관리 사안)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

\* (대상 기업 선정기준) 기후변화 관련 사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중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온실가스 배출 관련 ESG 평가지표 등 고려)

- 주주활동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및 후속조치를 수행함

| 주주활동     | 상세 내용   |
|----------|---|
| 비공개 대화   | 사실관계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위한 비공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면담 수행                              |
| 비공개 중점관리 | 개선이 없는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여 비공개 대화 수행                                    |
| 공개 중점관리  |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중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명단을 게시하고 비공개 대화 수행                   |
| 후속조치     |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연도 말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절차 추진 |

- 해외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활동
  - 환경 이슈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해외 기관 투자자와의 교류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가입

## [종합토론]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 김수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과장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소개
  -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 후, 2021년 5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음 해 1월부터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
  -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4대 핵심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대상은 2023년 예산 기준 288개 세부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11.9조원에 달함
    - \* (1)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및 탄소흡수원 확대, (2) 탄소중립 유망기업 인력 양성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 (3)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탄소중립 국민인식 제고, (4)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정책적 기반 조성
  - 이 중 정량사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예상량은 2023년까지는 336만톤이며, 2030년까지는 2,871.7만톤으로 추정됨
- 2023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은 2024년 결산 과정에서 달성도 점검 예정
  - 달성도 점검을 위해 결산서에는 연도별 감축량 등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산정식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2023년 11월부터 결산서 작성 준비를 시작하여, 11월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지침을 송부하게 되며, 한국환경공단이 결산서 작성 교육 등 지원 업무를 수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2024년 4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2024년 5월 국회 제출 예정

-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의 문제점
  - 결산 전문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처의 과다 추계 논란
  - 제도적 한계로는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2023년 9월에 기후인지 예결산으로 포괄적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안 제출
- 선진국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 많으며, 내년 결산 결과와 평가 역시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함

### 박혜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서기관

- 공공기관 ESG 공시의 의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국가 간 협약으로 강제되어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가이드 역할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지와 책임 필요
- 공공기관의 ESG 정보공개 수단으로 정부의 ESG 공시지침 마련 필요
  - 정부가 올해 2월, 통합공시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ESG 경영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및 추진체계를 ESG 경영보고서의 형태로 공시하도록 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Scope 3(기타 간접배출)까지 점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음
  - 이에 정부는 ESG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Scope 3 측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ESG 공시기준 마련 시, IPSASB 등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관 성격 및 고유 사업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특수성 고려 필요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347개 기관과 지방공기업 410개, 지방출자출연기관 856개 등 1,600여개에 달하며, 기관의 고유 사업, 수익구조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기업은 공공성과 시장형 기업의 특성을 모두 지니므로 이러한 기관에 대한 공시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금융 및 연구 분야 등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이 각기 달라, 기관별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별 중요도는 상이하나, 현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므로 기관별 중요도가 다른 과제나 성과가 제대로 공시되지 못함
- 앞으로 추진될 ESG 경영보고서를 통해 각 기관의 중요한 ESG 경영활동이 제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관 간 ESG 관련 보고서 작성 수준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상호 협력 필요
- 민간에서 논의되는 공시기준과 다양한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이중중대성 등 민간 기준과는 달리 적용되고 추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도출 필요

###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경영센터장

- 우리나라 ESG 공시기준 제정 현황
  -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의 중이며 아직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ESG 기준 제정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국제 정합성을 갖추되,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KSSB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임
  - ISSB 기준은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토대로 국가·산업별 이슈, 비용·혜택, 데이터 가용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 중
- 공공부문 기후 공시기준 제정
  - 공공과 민간 간 기후 공시기준의 차이는 없으며, 민간 기준에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적용하면, 공공부문의 기후 공시기준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0월 중, 호주에서 IFRS S2를 기반으로 법인의 고유 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 정보 등의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 관련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영리기업뿐 아니라 비영리기업에도 적용됨
- 공공부문의 가치사슬 정보 공시에 대한 고민 필요
  - 기업의 가치사슬은 1~2차 변동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나, 공공부문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 정부출자 비영리기관 중 보고실체 차원에서 가치사슬의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 공시로 규정 필요

## 이보화 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

- 공공부문 ESG 보고 지침 관련 시사점
  - 공공기관이 정보 공시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과 템플릿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시장형 공공기관은 KSSB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준시장형 및 기타 공공기관은 별도 기준 적용 필요
  - 특히, 제조시설보다 주로 오피스 형태를 띠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 물리적·전환위험에 대한 재무적 영향 측정은 적절하지 않고, 가치사슬 측정 비용도 과다하므로 실익 측면에서 필요한 공시 항목 고려 필요
  - 알리오 통합공시시스템 등 기존의 정보 공시 항목을 고려하여 ESG 공시 정보를 마련 필요
- 공공부문 준비 사항
  - 특히 시장형 공기업들은 재무제표 기준의 연결정보 공시, 재무제표 분석 정량화<sup>9)</sup>에 대한 고도화 및 ESRS first set 기준에 따른 이증중대성 평가 수행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공공부문의 민간부문 ESG 정보 공시 지원 필요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정보 공시를 지원하며, 공공부문의 지원 정도에 대한 공시 또한 필요함. 또한, 기업 입장에서 CBAM<sup>10)</sup> 영향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며, CBAM 인증서 가격 제공 등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

9) TCFD 체계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물리적·전환위험 및 기회를 재무적 부분으로 정량화

10) EU Fit for 55의 핵심인 탄소국경조정제도로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에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

**참고**    국제심포지엄 행사 사진



# 202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가. 개요

대주제: 한국사회와 정부회계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4:30~16:00

장 소: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제발표 및 토론〉

#### [국가회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

[사회·발표]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토론 1] 임동완 단국대 교수

[토론 2]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

[토론 3] 이제경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토론 4] 최서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토론 5] 박규동 광운대 교수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주제: 정부회계 연구의 현황과 과제]

#### ● 주요 발표 내용

- (발표: 박성진) 정부회계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향후 대안 점검

- 1) 한국정부회계학회가 행정학 전공자와 회계학 전공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느냐 실질적인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 행정학 기반: 재정 과정과 재정제도 등에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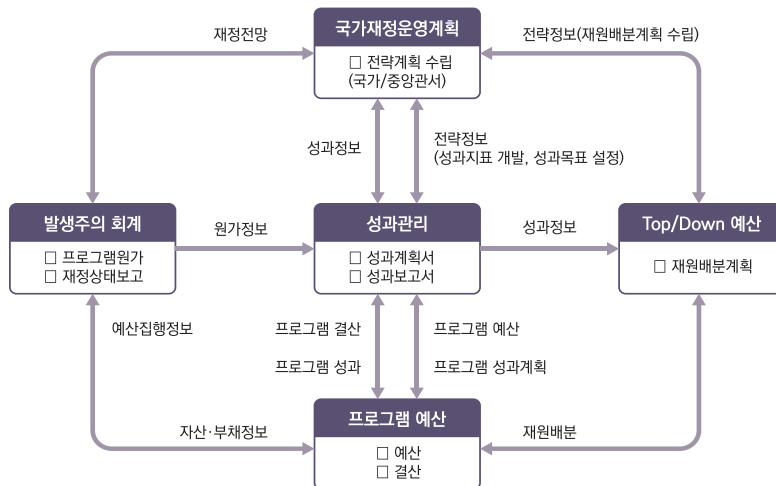
- 회계학 기반: 회계·경영 분야에 특화
- 행정학과 회계학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연구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 학생들이 배우는 첫 지점인 교과서에서도 행정학과 회계학의 융합지점이 거의 없음

## 2) 정부회계 연구의 연구논문에 대한 경향성 점검

- 공공부문 일반정부를 포괄하면 실증분석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연구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이는 근본적으로 자료의 미흡에 기인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 예산의 편성과 심의 및 집행 등은 관리회계 측면이고, 국가회계와 결산은 재무회계 측면이므로 이 두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연구는 많은 논의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발생주의 회계의 활용은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함

## 3) 정부회계의 근본적 질문

- ①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도입 의도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 제도의 성숙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정부회계 연구는 가장 먼저 무엇에 답해야 하는가? 어떤 연구부터 해야 하는가?
  - 일반목적재무제표(General-Purpose Financial Statements) 작성을 위해 마련된 회계기준/제도가 정부의 전략적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가?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2012, p.63

② 우리나라 재정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제도와 정부회계의 분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회계 연구는?

- 문제의 해결/개선을 위한 정부회계 연구 노력이 미비해왔는가?
- 선행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대안들과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주목할 이슈는?  
: 예) 사전통제 목적의 현금주의 기반 품목별 예산분류체계가 발생주의 회계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에 미치는 영향은?  
: 예) 재정활동의 stock과 flow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다년도 정책사업과 중기재정계획 등에 활용되는 방안은?



③ 기업회계제도에 기반하여 고안된 정부회계제도의 근본적 부정합성은 없는가?

- 기업회계: 경제행위 당사자 간 이루어진 등가물의 (즉, '시장가격'에 맞춘) 자발적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s)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요구 →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목적(decision usefulness) → 정보이용자 = (외부)투자자 중심  
: 기업에서는 소유/경영이 분리되고 주주/투자자들은 경영성과, 즉 '결과'에 자본투자 또는 회수의 '의사결정'을 함
- 정부회계: 조세 등 비자발적 비교환거래(non-exchange transactions)를 포함하며, 지출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요구되고, 또 이러한 재정 과정 전반에 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정보이용자 = 납세자, 공공서비스 수혜자, 정책결정자 및 기타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  
: 정부운영 또한 주권자와 행정부가 분리되지만 공공서비스 및 정책집행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책임성 또한 중요함. 이때 책임성의 대상은 누구? 의사결정자는 누구? 의사결정의 대상은 무엇? 국민? 국회? 행정부?

## ● 주요 토론 내용

### 토론 1 임동완 단국대학교 교수

#### 1) 예산 과정에 회계정보 반영 필요

-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결산보다는 예산 편성과 심의에 관심이 많고, 정부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계에 관심을 갖거나 회계정보가 예산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

#### 2) 선진국의 추정재무제표 작성 및 활용

-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발생주의 회계를 결산과 예산에 활용하고,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함. 호주의 주정부 사례를 보면, 중장기적 부채의 변화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예산에 활용함.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기금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나 그 수준이 높지 않음
- 몇몇 선진국에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심의 시에도 추정재무제표를 활용함. 현금이 아닌 감가상각에 예산을 결정하여 해당 부서가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등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음
- 뉴질랜드와 호주는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급진적인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정부부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아이슬란드나 스위스의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예산, 결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와 프로그램 예·결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생주의 회계정보 반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4)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규칙으로서 활용

-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면 대부분 도구로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 결정규칙으로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 배창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1) 정부회계 연구는 지방정부와 사례연구 위주로 논의됨

- 정부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중앙보다는 지방정부, 실증보다는 사례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데이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증분석 연구가 부족한 점이 아쉬움

## 2) 정부회계 관련 교과목 신설 및 학생들의 연구 참여 필요

-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관련 과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음
- 연구자 특성을 살펴보면, 학계의 교수나 현장의 공무원들이 주류를 차지하므로,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박사나 석사과정 학생들의 정부회계 연구 참여가 필요

## 3) 학회 차원의 연구 성과 확산 필요

- 정부회계 연구 성과들이 지자체와 사례 연구 중점임을 감안하면,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연구 수요가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성과 발표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학회 연구자들이나 각 기관에서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한 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토론 3 이제경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1) 행정학과 회계학 연계의 필요성

- 재무행정론에는 정부예산 외, 재정학과 공공경제학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어야 하고, 지방재 관련한 재정정책이나 비용편익 분석 등이 정부회계와 아우러져야 함. 발생주의 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기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 예산에 따른 장기적 국가계획과 재정계획의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임
-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제도나 기준이 전략적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에 활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행정학자들도 회계가 결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

- 정부회계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통일된 데이터 소스 등이 필요하며, 관련 실증 분석의 통제변수에는 회계변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및 기관별 관리적 변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행정학과 회계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미래의 예산 혹은 수입 예측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하는 방식 도입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정부회계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논의 필요

## 2) 비용편익 분석 및 지방채 관련 연구 추진 필요

- 비용편익 분석과 지방채 연구는 회계에서 다뤄야 하나 현재 미진하여 학회 특별 호 발간을 통해 정부회계 연구 섹션은 특정 주제나 특정 방법론으로 채워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추진 필요
- 미국의 경우 수정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외 제도와의 비교 분석 연구도 추진 필요

### 토론 4 최서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 1) 국방예산의 편성 및 집행

-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사업(무기체계 운영)과 전력운영비(무기체계 운영 제반요건) 등 2개의 회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방위력 개선비는 기획관리체계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며, 기획관리체계는 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유지 등의 절차로 운영되고, 각 단계에서 분석 평가를 진행함
- 전력운영비는 역시 기획관리체계로 진행되나, 분석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한 개선 연구를 추진 중임

#### 2)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정부회계 데이터 활용

-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활용한 분석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활용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임

**토론 5** 박규동 광운대 교수

- 정책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이 환류이므로 결산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서도 단절적 균형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토론 6** 기타 토론

- 국가회계의 정보 수요자인 국회의원과 예산 결정자들이 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충당률을 활용하여 자산 노화율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분류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데이터 산출 및 공시 필요



국가회계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2023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가. 개요

**대주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명회계  
**일 시:** 2023년 12월 16일(토) 10:00~20:0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주 최:** 한국회계학회, 이화여자대학교  
**후 원:** 삼일회계법인,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KB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PFK서현회계법인, 흥모 앤 송자장학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세무학회

### 〈주제발표 및 토론〉

#### [국가회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

[사회·발표]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표 1]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토론 1]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발표 2]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토론 2] 배창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발표 3] 양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팀장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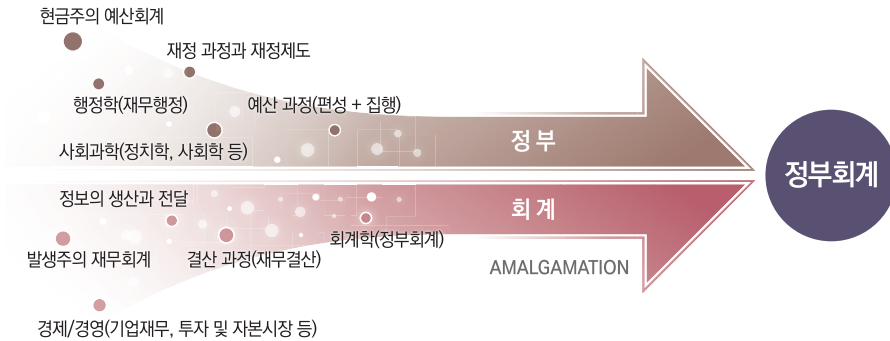
### [주제 1: 정부회계 연구의 현황과 이론적 정향]

**발표** 정부회계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향후 대안 점검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1) 정부회계 연구의 정체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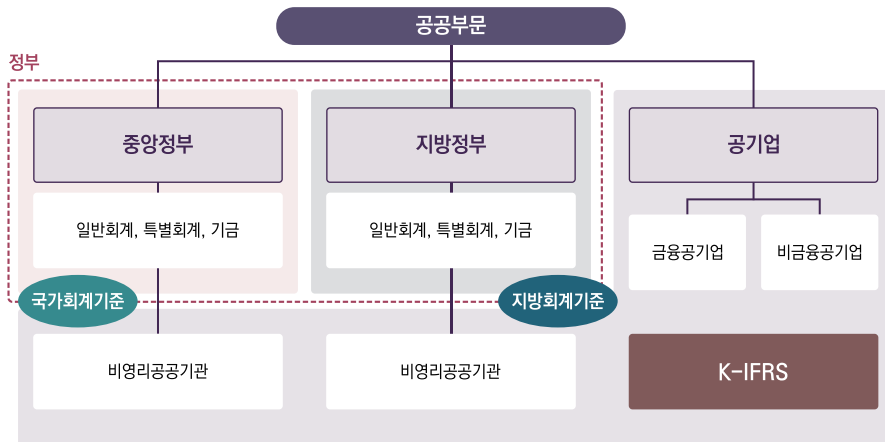
- 정부회계 연구의 한 축은 정부의 재정운영 측면에 대한 연구로서, 재정 과정의 커다란 한 축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심의를 담당하는 예산 과정에 주목함

- 또 다른 한 축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측면으로서, 결산 과정에서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함
- 이 양축이 함께 국가재정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음



## 2) 공공부문 회계기준들이 각 실체에 따라 다름

-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지방정부는 지방회계기준을 사용하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및 비영리법인은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3) 공공부문의 회계 연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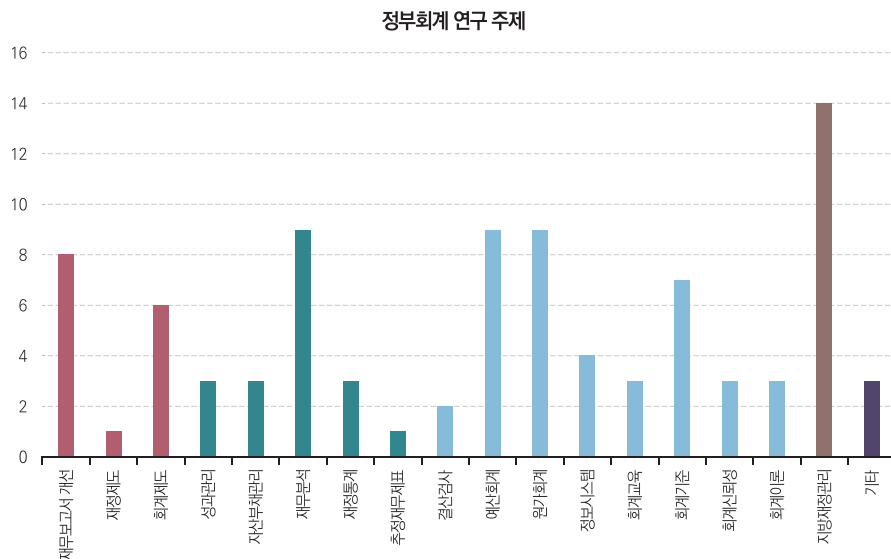
- 공공부문의 회계 연구의 실체/주제별 유형 분류
  - : 비영리법인이 97편, 25%로 가장 높은 비중
  -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21%, 20%로 유사한 비중
- 공공부문의 회계 연구의 분석방법별 유형
  - : 개별 사례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이 대부분
  - : 권선국 외(2012): 다양한 방법론 필요

**표 1** 공공부문의 회계 연구의 분류 현황

| 실체/주제별 | 개수(개) | 비중(%) | 분석방법별   | 개수(개) | 비중(%) |
|--------|-------|-------|---------|-------|-------|
| 비영리법인  | 97    | 25    | 사례 분석   | 205   | 54    |
| 지방정부   | 80    | 21    | 실증 분석   | 140   | 37    |
| 공공기관   | 76    | 20    | 설문 분석   | 20    | 5     |
| 중앙정부   | 57    | 15    | 기초통계 분석 | 16    | 4     |
| 정부일반   | 27    | 7     | 소계      | 381   | 100   |
| 기타     | 25    | 7     |         |       |       |
| 외국사례   | 11    | 3     |         |       |       |
| 재정통계   | 5     | 1     |         |       |       |
| 문헌분석   | 3     | 1     |         |       |       |
| 소계     | 381   | 100   |         |       |       |

**그림 1** 정부회계 연구(2012~2022년) 게재 논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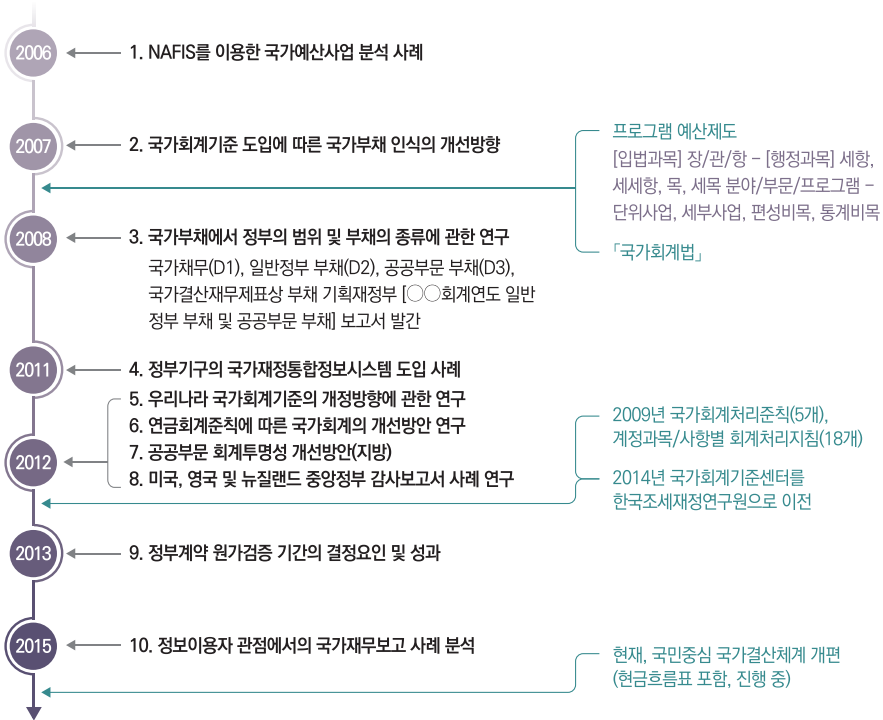
(단위: 건)



#### 4)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회계를 중심으로 지방회계 및 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포진하며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통합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가 존재함
- : 가장 많은 연구 결과는 국가회계 분야에서 수행되었는데, dBrain의 전신인 NAFIS에 대한 최초 연구를 시작하였음
- : 국가회계의 주된 연구 결과로 계정과목 회계처리에 해당되는 우발부채와 회계 오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회계기준인 개념체계, 보고실체, 측정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회계정보를 활용한 결산서 비교분석과 추정재무제표 등의 연구가 진행됨
- : 국가회계기준으로 통합되지만 자체 기준으로 관리하는 연금기금과 육군정보시스템, 감사시스템과 원가를 다른 가지로 구분하여 구조도를 작성함

**그림 2 『회계저널』에 게재된 정부회계 연구 선행연구 현황 1(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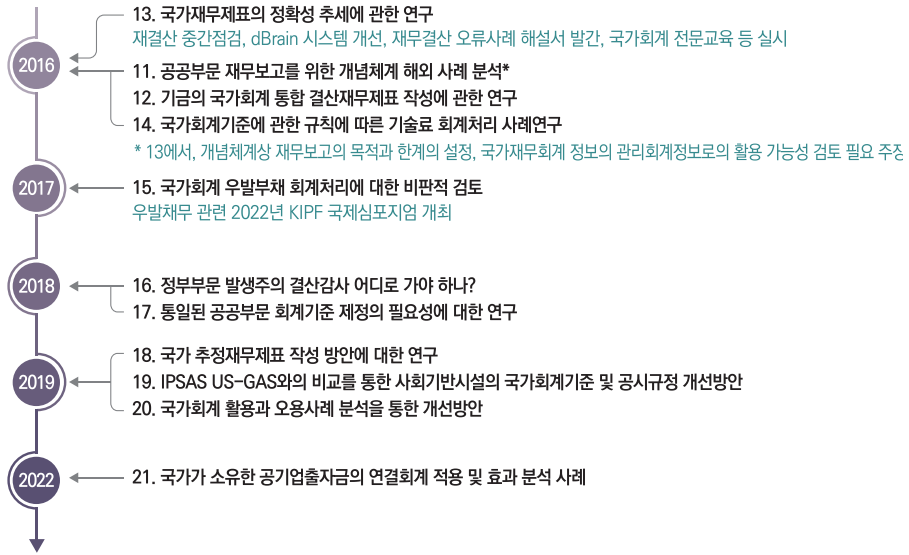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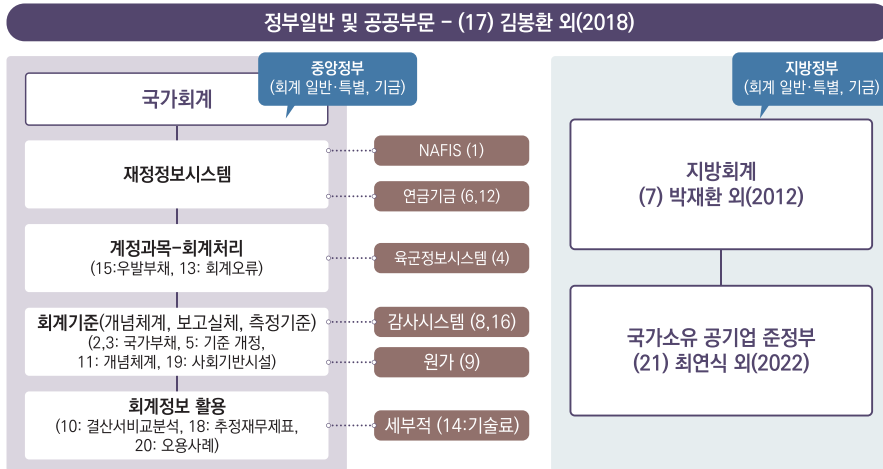


그림 3 선행연구 구조도(『회계저널』 중심)



### 5) 향후 정부회계의 연구의 방향성

- 기업회계제도에 기반하여 고안된 정부회계제도의 근본적 부정합성은 없는가? (최연식 외, 2016)  
: 정부회계제도의 본질적 질문
- 최연식 외(2016, p. 254)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 관리회계정보로 활용가능성을 검토
- 김완희 외(2019, p. 51) 「국가회계 활용과 오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 재정제도 간의 연계부족을 지적하며 정부회계 연구의 확장 필요

**토론 1**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 재정개혁의 하나로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는 2007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는 2009년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 후 2011회계연도 부터 발생주의 국가회계 결산서를 국회 제출

**1)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학술지별 발표 빈도)**

**2) 성과보고서(2009회계연도부터 국회에 제출)**

- ① 결산보고서 = 결산개요 + 세입세출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② 성과관리제도
  -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 위주로 운영하는 제도(효율성 제고)
- ③ 성과관리주기: 성과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성과보고 → 성과정보의 환류

**3) 재무회계 결산과 성과관리**

- 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 ② 예산과 회계의 연계: 예산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집행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
  - (보다 완전한 정보를 활용한) 예산 과정의 합리적 통제, 합리적 의사결정의 확보
  -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성과관리를 통한 환류

#### 4) 회계학자들의 역할

- ① 예산과 예산 과정에 대한 회계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함
  - 예산회계의 구조: 예산(회계의 중심), 수입, 지출
  - 예산회계의 주 목적: 예산의 배분 및 역할을 강조
- ② 성과정보의 신뢰성 강화
  -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대표성과 타당성)
  - 확정된 예산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도전적인) 성과목표치
  - 성과 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 ③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우선순위 고려)
  - 성과 미흡의 원인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 예산투입 부족?
- ④ 성과관리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 ⑤ 성과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접근성 확보



## [주제 2: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ESG 공시기준 제정의 이론적 쟁점]

**발표 2**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수립 가능성 논의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경과

- 2022년 1월, 세계은행은 자체 보고서<sup>1)</sup> 발간을 통해 민간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절반 정도를 국제시장이 차지하는 등 그 규모가 큰 공공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한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지적에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2022년 3월, IFRS S1, S2 공개초안이 발표되었으며,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자문보고서(CP)를 회람하면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과는 별도로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2022년 12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기후 관련 공시사항 및 천연자원 등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중점으로 공시기준 마련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3월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기준 제정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작성하기 위한 IPSAS 개념체계와 IFRS S1, S2 및 GRI 기준을 참고하겠다고 공표하였음

### 2) IPSA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 논의 현황

- 2023년 12월, IPSASB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안)을 살펴보면, 핵심 문안은 투자자 중심의 IFRS S2와 영향을 반영하는 GRI 기준(1, 3, 201, 305)을 차용하고, UN SDGs의 내용도 동시에 참고하는 등 다른 기준들의 문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기준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향후, IPSASB는 2024년에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2025년에 기후 관련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지난 2023년 9월 회의에서 뉴질랜드 XRB의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체계가 성공적으로 수립된 데에서 자

1) World Bank, "Sovereign Climate and Nature Reporting: Proposal for a Risk and Opportunities Disclosure Framework," 2022,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615001312229019/pdf/P170336065a94c04d0a6d00f3a2a6414cef.pdf>, 검색일자: 2023. 12. 16.

신감을 얻어 이와 같은 목표를 수립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뉴질랜드는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가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도 IFRS S1, S2에 대응하는 기준 제정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기후 관련 공시기준 마련이 가능한 상황임

### 3) IPSA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 현재 IPSASB는 기업회계의 투자자 중점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공공부문으로 가져와 재무보고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IFRS S1, S2 적용의 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를 비교해 보고, 재무보고와 지속가능성 보고의 근본적 성격 차이를 비교해 본 후, GRI와 IFRS 등 원칙적으로 다른 두 개의 기준 조합이 가능할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정보이용 목적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제공자(투자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단일 목적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정부회계에서는 의사결정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회계 책임성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함
- (정보 수요의 차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만을 알고자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함. 즉, 정부회계 정보의 이용목적은 다중성을 띠는데, 자원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 따라 회계 책임성과 의사결정 유용성 등의 정보 수요 목적은 상이함. Demski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le Theorem)가 암시하듯이 각기 다른 정보 수요를 동일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움
- (정보의 시간적 범위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현재의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정보를 요구하나, 정부회계에서는 재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른 시간의 범위도 병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IFRS S1, S2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유용성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GRI 기준은 의사결정 유용성이 아닌, 사회 및 사람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이 제정되었음. 이와 같이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기준을 합치는 것만으로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 토론 2 배창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이 연구의 경우,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보 제공인 지속가능성 보고와 투자자 중심의 정보 제공인 재무보고 간 근본적인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의 프레임워크를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함
- 첫째, IPSASB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회계책임과 의사결정 유용성을 정부 재무보고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 및 사회·정치적인 이슈가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의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
- 둘째, 공공부문의 재무보고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재무보고 사용자와 정보수요를 식별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개발될 필요성을 주장함
- 셋째, IFRS S1, S2는 재무보고의 주요 사용자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나, 다른 기준은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
- 지금의 시대 정신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기후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슈와 공급망 내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항목이나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공공부문 기관 특성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항목을 추가하면 좋을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



### [주제 3: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3** 국가회계정보시스템 효과성 평가 및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양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팀장)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매년 일정 수준의 전기 오류 수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재무제표의 회계품질이 높을수록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Feng et al., 2015),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국가재무제표는 국민으로부터 국세, 부담금 등의 조세를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자원을 다양한 국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운용한 결과물이므로,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 측면에서도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개선방안을 검토함

국가결산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는 정부 중앙부처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 설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회계오류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 실시
- 인적 요인은 짧은 결산 업무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남
  - 자산재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사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전문가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일선 결산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일임하는 상황이 오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





# 오피니언



-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큰 틀에서 2007년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부문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결산을 실시한 이후 벌써 10여 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적용한 효과에 대한 애초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회고의 일환으로, 국가회계 분야 발생주의 회계의 산물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 재정상태표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확실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재정운영표는 성과보고서와 함께 활용되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확실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정책 과제들이 도전적으로 발굴되었고, 그중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

계를 도입한 지도 18년 차에 접어들었다. 먼저, 2007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발생주의를 적용하였고, 국가회계에는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반영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정식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였다. 2012년 5월에 국회에 제출된 최초의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 이후 매년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국가결산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국가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첫째는 현금주의로 표현되는 예산회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운영 효율성과 회계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정보 생산의 기본 틀로 기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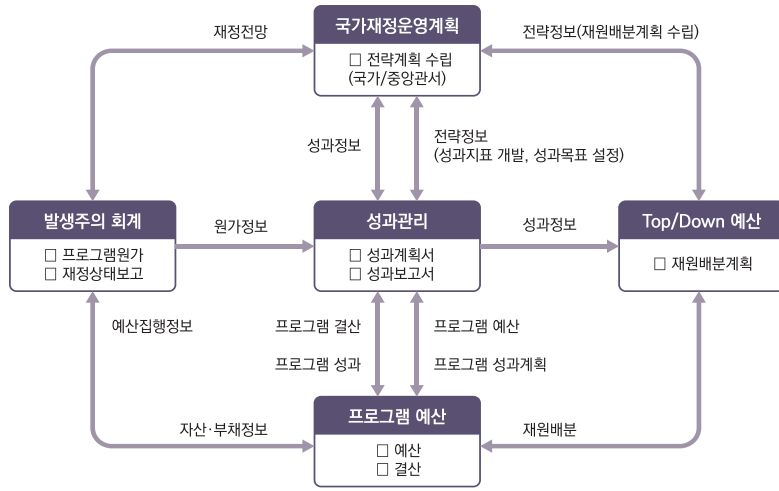
현금주의 예산결산과 발생주의 재무결산을 포함하는 국가결산은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의 운영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기록한 것이다. 현행의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고보고서 등으로 구성된다. 즉, 국가의 재정운영 결과 및 재정상태, 재정운영 성과를 결산주체별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중앙관서별로 보고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분석·평가함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과정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국가결산이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온 것일까?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는 2000년대 이전까지 반세기에 걸쳐 현금주의 기반의 일본 재정제도를 모방한 채 유지되어 온 터라, 재정당국에게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도입은 대단한 모험이자 도전이었을 것이며, 초기 국가회계제도를 안착시키는 동안은 국가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발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로 여겨졌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훌쩍 넘는 경험이 축적된 지금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다양한 결과물이 우리나라 재정제도 간의 연계성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기대했던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져볼 시점이 되었다. 즉,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산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와 함께 기존의 예산회계제도 및 재정관리체계를 통해 산출되었던 여타 재정정보와의 연계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여러 효과 중에는, 미래 재정여력의 변화를 현재 시점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재정상태표의 작성 과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의 경제적 편익과 부담을 반영하는 자산의 증감 또는 부채의 증감이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현금의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현금주의 회계는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큰 취약점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제도 아래에서는, 당기 현금의 유출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증감과 부채의 증감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이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다. 한 예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연금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2015년 공적연금 개혁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들 중 하나는, 미래 연금 관련 재정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현재의 재정상태표에 보고하도록 하는 연금충당부채의 등장이었다. 국민이 연금충당부채의 유의미한 추정치를 확인함으로써, 점진적 개선 또는 개혁적 조치에 대한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회계하의 재무결산을 통하여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과도한 부채의 결과가 국가의 재정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국민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재무행정 전문가들은 재정상태표의 국제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국가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성질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산출 과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에서 회계기준의 제·개정 시 IMF의 「재정통계지침(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rain 시스템의 준비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도입 과정에서 IMF의 「재정통계지침」과 UN의 「국민계정지침(System of National Accounts)」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제적 비교를 통해 재정상태표 정보의 외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만,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시 기대하였던 바처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유용한 국가회계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2012, p. 63

한편,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재정운영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개별적인 재정사업의 원가를 기간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다. 2000년대 초 시작된 4대 재정개혁의 일환인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 Down)하에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재정총량관리의 제약을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통해 완화시키며, 자율성에 따른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함께 운용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 재정제도들은 발생주의 회계정보라는 연결핀(linchpin)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하며 확인하는 데 그치지만,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면 투입되는 원가가 투입의 결과물인 성과와 합리적으로 대응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재정사업에 투입된 원가와 관련 성과가 서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대응되어서 해당 사업의 효율 및 효과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를 의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정운영표에서 확인되는 프로그램총원가와 재정운영순원가 정보가 해당 사업별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유의미한 관련 정보가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세부적인 사업별로 발생한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부 사업별로 활용될 수 있는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과 활동기준예산(Activity-Based Budgeting)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정리하면,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기대되었던 첫 번째는, 재정상태표 관점에서 전반적 국가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재정운영표 관점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기대에 대한 사후 평가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미흡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할 것이다.

현행 주요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된 개편방향이 제시되었다. 재정상태표의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간소화하고 장단기 구분이 아닌 항목별 계정통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운영표와 관련해서는 예산 15대 분야별 사업순원가가 산출되며, 분류의 간소화 및 수익·비용의 측면에서 세부 항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질별 정보도 주재무제표로 작성될 예정이다. 현금흐름표의 신규 도입도 신중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흩어져 있던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가 주석으로 통합하여 단일화된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에는 부총리 메시지 및 결산검사 결과가 추가되며, 재무결산 분석 및 국민 관심도가 높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설명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국가회계와 재정통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회계학자들과 재무행정학자들이 서로 학문적인 의견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국가회계 분야와 재정통계 분야에서 추구하는 공통의 성과를 내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동시에 도약하는 기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국가회계 분야와 재정통계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의 부활도 기원해 본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mailto:gafsc@kipf.re.kr)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